

연구보고서(수시과제) 1

2016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김호주 · 김병권 · 김해람



2016 연구보고서(수시과제) - 1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김 효 주 (본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병 권 (본원 연구원)

김 해 람 (본원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효주·김병권·김해람(2016).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발 간 사

2015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 중의 하나로 2009년 이후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그간 성인지예산제도는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성평등에 관한 법적인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사업의 성평등 분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통해 공무원들의 성평등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현재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책 방향은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제도적 자리매김이 아닌,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방향의 출발점이 ‘적절한 대상사업의 선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적절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부처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작성 내용의 질을 제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는 것, 그리고 이를 활용한 합리적인 분석을 통한 예산 변화, 이 구조의 출발점이 바로 ‘적절한 대상사업의 선정’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사업’의 문제는 제도 도입 이전부터 가장 큰 관심사였으나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양한 방안들이 ‘대상사업’ 문제 해결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제도를 더욱 발전된 형태로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 및 연구과정에서 귀한 의견을 주신 공무원 분들과 전문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7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이 명 선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 재정운영에 성인지적 개념과 원리를 도입하여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의 성격을 지님
 - 정부의 주요 재정제도
 -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국가의 공적 대응
- ☐ 이에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갖는 여러 행위자들이 제도 안에서 복잡한 상호 관계를 이루고 있어, 이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제도 운영 과정의 비효율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
-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성인지예산제도는 전체 재정사업이 아닌, 일부 재정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 제한된 규모 안에서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성인지예산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사업 선정, 공감대 확산,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의 질 제고, 신뢰할 수 있는 성별 정보 산출, 이를 활용한 적절한 분석, 분석에 기반한 예산 변화의 순환 구조로 변화되어야 함
 - 이러한 선순환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적절한 대상사업 선정’임
-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와의 연계가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 대상사업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체계의 변화내용(2010~2017회계연도)
 - 대상사업 변동사항 및 변동사례(2010~2016회계연도)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문제점
 - 선행연구에 기반한 문제점
 - 운용실태에 기반한 문제점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개선방안
 - 단기적으로 이행 가능한 정책방안 제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각 연도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및 세부지침, 선행연구 등
- 대상사업(1,982개) DB 구축 및 내용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3.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 성인지예산제도는 일반 예산과정안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성인지예산서는 정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성인지결산서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따라서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절차 및 기준, 작성양식 등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대상사업 선정기준

- 2011회계연도 이후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전년도 작성사업’,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의 구조로 유지되어 옴
-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의 하위 기준들은 지속적으로 변경됨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 포함
 - 국정과제 등 주요 사업을 선정하도록 변경
 -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발적인 대상사업 발굴을 유도

□ 대상사업 선정체계

- 대상사업 선정은 지침을 배포하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국회 최종 제출 전 전체 대상사업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짐
- 2014회계연도까지는 대상사업을 해당 부처에 기 통보하였으나 2015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자발적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별도 통보하지 않음
- 대상사업 적합성 검토
 - 2013회계연도부터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2014회계연도부터 3단계 협의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됨
 -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서 상설협의체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 대상사업 변동사항

- 작성부처 변동사항
 -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작성부처가 변동됨
 -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있어 부처의 소극적 행태를 엿볼 수 있음
 - 대상사업 수가 2개 이하로 적은 부처들에서 잦은 변동이 일어남
- 대상사업 수 변동사항
 - 사업종료, 부처이관, 사업통·폐합 등이 주요 변동 요인임
 - 대상사업 추가 및 제외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음

□ 대상사업 변동사례

- 교육부
 - 2014회계연도 조직개편으로 기존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일부 이관되면서 대상사업 수가 감소함
- 문화체육관광부
 - 비교적 계속 작성사업이 많은 편이나, 적극적인 대상사업 발굴은 없음

4.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문제점

- 대상사업 선정기준, 대상사업 선정체계, 공무원 수용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대상사업 선정기준: 중요사업을 포함하거나 부적절한 사업을 제외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대상사업 선정체계: 대상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고 중요사업을 선정할 기구 설치가 요구됨
 - 공무원 수용성: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공무원의 낮은 수용성을 제고시킬 방안 모색이 요구됨

〈표 1〉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문제점 요약

선행연구에 기반한 문제점		운용실태에 기반한 문제점
① 대상사업 적절성 - 부적절한 사업이 포함되거나 적절한 사업이 미포함됨 ② 대상사업 선정절차 - 적절한 대상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함 - 작성부처의 소극적 행태를 유발함 ③ 대상사업 확대 - 일부 부처에 편중되고 전체 재정사업의 성인지적 접근이 어려움 ④ 대상사업 선정체계 -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구 및 조직 설립이 요구됨 ⑤ 공무원의 낮은 수용성		① 대상사업이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구조 - 일반 예산안의 범주 안에서 움직임 - 외부에서 대상사업이 결정됨 -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한 사업 미포함 ② 부처 및 담당자의 소극적 행태 - 주변사업 및 소액사업 위주의 선정 - 과도한 제외요청이 이루어짐 ③ 대상사업 적절성 판단을 위한 기준 부재 ④ 상설협의체의 운영 근거 부재 - 운영 효력이 낮아짐
문제점(III장)		개선방안(IV장)
요약	1. 대상사업 선정기준 - 중요사업 포함 기준 - 부적절한 대상사업 관리	성인지예산 세부지침 개정
	2. 대상사업 선정체계 - 대상사업 적절성 심의 - 중요사업 선정	상설협의체 기능 강화: 훈령 신설
	3. 공무원 수용성 제고	성인지예산 작성지침 개정

5.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개선방안

- ☐ 대상사업 선정기준 문제 개선: **성인지예산 세부지침 개정**
- 상설협의체 검토 결과 중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함
 - 부처의 대상사업 제외요청을 세부지침에 명시하여 공식화하되,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현재의 과도한 제외요청 문제를 사전에 방지함

〈표 2〉 성인지예산 세부지침 개정(안)

원안	개정안
<p>1. 적용대상</p> <p><input type="checkbox"/>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p> <p><input type="checkbox"/> '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p> <p><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p> <p>○ 국정과제 등 해당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중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여지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p> <p>– 여성, 가족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 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등</p> <p>○ '16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 사업은 반드시 포함</p>	<p>1. 적용대상</p> <p><input type="checkbox"/>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p> <p><input type="checkbox"/> '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p> <p><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p> <p>○ 국정과제 등 해당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중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여지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p> <p>– 여성, 가족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 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등</p> <p>○ '16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 사업은 반드시 포함</p> <p>○ 성인지예·결산 상설협의체 검토 결과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기 통보 후 작성</p>
<p>2. 세부지침</p> <p>~ (생략)</p> <p><input type="checkbox"/> 행정사항</p> <p>○ 사업담당자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여 작성방법 숙지 후 성인지예산서 작성</p>	<p>2. 세부지침</p> <p>~ (생략)</p> <p><input type="checkbox"/> 행정사항</p> <p>○ 사업담당자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여 작성방법 숙지 후 성인지예산서 작성</p> <p>○ 외부기관의 지적사항(대상사업 부적절)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조정 가능</p>

□ 대상사업 선정체계 문제 개선: **상설협의체 운영 신설**

-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별도의 조직 및 기구 설치 대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설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함
- 상설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새로운 운영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함

〈표 3〉 성인지예·결산 상설협의체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26조 및 제57조에 따라 운영되는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성인지예·결산 상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성인지예·결산 작성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2. 성인지예·결산 대상사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인지예·결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의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및 재정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2. 성인지예·결산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③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예산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이, 결산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의장직을 수행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 의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운영) ① 의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체는 연 3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인지예·결산 제도와 관련된 공무원 및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

□ 공무원 수용성 문제 개선: **성인지예산 작성지침 개정**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제시된 기타 작성지침들과 비교해 볼 때, 성인지예산 작성지침의 내용구조가 상이하여 이를 개선
- 작성지침 상에 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작성결과가 예산배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예산연계 기준] 신설
- 사업담당자의 예산배분 변화에 대한 부담감을 낮춰주고 동시에 제도 운영 과정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표 4〉 성인지예산 작성지침 개정(안)

원안	개정안
<p>[작성 대상 사업]</p> <p>□ 성인지 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16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 기타 성별영향 분석이 가능한 사업 ○ '16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 사업은 반드시 포함 <p>[세부 지침]</p> <p>□ 성인지 예산 작성부처는 ~</p> <p>~ (생략)</p>	<p>[기본원칙]</p> <p>□ 재정사업이 성평등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연계 강화</p> <p>□ 작성결과를 사업 운영 등에 적극 활용</p> <p>[예산연계 기준]</p> <p>□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한 경우, 작성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p> <p>[작성 대상 사업]</p> <p>□ 성인지 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16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 기타 성별영향 분석이 가능한 사업 ○ '16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 사업은 반드시 포함 <p>[세부 지침]</p> <p>□ 성인지 예산 작성부처는 ~</p> <p>~ (생략)</p>

6. 결론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제도임. 그 개념의 난해함과 모호성, 여성정책의 주변화된 위상과 지위로 인해 행위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실제 성별요인을 고려한 예산배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됨
- 이러한 전략적인 접근의 출발점이 ‘적절한 대상사업의 선정’임
 - 선행연구 및 운용실태에 기반하여 대상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
 -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로 이행이 가능한 정책 개선안을 제안

목 차

I. 연구개요	1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II.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7
1. 대상사업 선정기준	11
2. 대상사업 선정체계	17
3. 대상사업 변동사항	20
4. 대상사업 변동사례	31
가. 교육부	31
나. 문화체육관광부	37
III.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문제점	43
1. 선행연구에 기반한 문제점	45
2. 운용실태에 기반한 문제점	50
3. 요약	56
IV.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개선방안	59
1. 성인지예산 세부지침 개정	61
2. 상설협의체 훈령 신설	68
3. 성인지예산 작성지침 개정	72



V. 결 론	77
■ 참고문헌	83
■ 부 록	87
[부록 1] 2016회계연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리스트	89
■ Abstract	103

표 목 차

<표 I-1>	연도별 성인지예산 현황	4
<표 II-1>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국가회계법 제15조의2	10
<표 II-2>	연도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12
<표 II-3>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 작성현황	14
<표 II-4>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의 관계	16
<표 II-5>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일정	17
<표 II-6>	체크리스트를 통해 발굴된 신규 대상사업	20
<표 II-7>	2010회계연도~2016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부처 현황	22
<표 II-8>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 수 현황	24
<표 II-9>	성인지예산서 작성 회계연도별·부처별 현황①	25
<표 II-10>	성인지예산서 작성 회계연도별·부처별 현황②	27
<표 II-11>	대상사업 수 변동사항	30
<표 II-12>	교육부 대상사업 변동 현황	33
<표 II-13>	문화체육관광부 대상사업 변동 현황	38
<표 III-1>	선행연구에 기반한 문제점-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46
<표 III-2>	선행연구에 기반한 문제점-연구보고서	48
<표 III-3>	연도별 대상사업 제외사유 및 예산안 편성 지침	51
<표 III-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55
<표 III-5>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문제점 요약	57
<표 IV-1>	성인지예산 세부지침 개정(안)	61
<표 IV-2>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정과제 예시(2011년)	63
<표 IV-3>	중요규제 판단기준	64
<표 IV-4>	예비타당성조사 예시	66

<표 IV-5> 성인지예·결산 상설협의체 운영규정(안)	68
<표 IV-6> 기획재정부 시행 훈령 예시	70
<표 IV-7> 성인지예산 작성지침 개정(안)	72
<표 IV-8> 공무원 의견조사 응답자의 특성	73
<표 IV-9>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내용	74
<표 V-1>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항목 및 젠더 관점	79
<표 V-2>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1

그림 목 차

[그림 I -1] 연구체계	6
[그림 II-1]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15



I

연구개요

- | | |
|--------------|---|
| 1. 연구목적 | 3 |
|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



1. 연구목적

정부는 ‘2009년도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결과를 토대로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 재정운영에 성인지적 개념과 원리를 도입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의 주요 재정제도이지만 한편으로는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국가의 공적 대응(마경희, 2014: p.449~450)’¹⁾으로써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에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갖는 여러 행위자들이 제도 안에서 복잡한 상호관계를 이루고 있어, 이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제도 운영 과정의 비효율성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성인지예산제도는 전체 재정사업이 아닌, 일부 재정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이 정부 재정운영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성인지예산의 규모는 7.5조원으로 전체 정부예산 대비 3.7%를 차지하였으나, 제도 시행 이후 7년이 지난 '16년도 성인지예산의 규모는 28.0조원으로 전체 정부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26.4%로 같은 기간 정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4.7%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지만(<표 I-1> 참조), 7.2%의 성인지예산 규모로 국가재정 전반의 성불평등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지예산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김영옥 외, 2009: p.99~100, 마경희 외, 2009: p.181~182, 조선주 외, 2010: p.128, 국회예산정책처, 2010: p.13~14, 2013a: p.19~20, 2015: p.36~37)이 주를 이루지만, 앞서 언급하였던 성인지예산제도의 특성 상 그러한 제도 변화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제한된 규모 안에서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상

1) 마경희(2014: p.449~450)는 ‘여성 정책이 대응하고자 하는 문제는 사회 부정의로서의 성 불평등 문제이며, 성 불평등 문제는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여성 정책은 이러한 성별 권력관계의 원천이 되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을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사회구조, 제도, 규범, 관행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의 공적 대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여성 정책의 하위 범주로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국가의 공적 대응’이라 정의하였다.

4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사업 선정기준과 선정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대상사업의 범위, 적절성, 선정기준, 선정체계, 선정방식 등)은 제도 도입 이전부터 가장 주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그 함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표 I -1〉 연도별 성인지예산 현황

(단위: 개, 조원, %)

회계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성인지예산							
작성기관	29	34	34	34	42	42	43
대상사업	195	245	254	275	339	343	331
예산규모	7.5	10.2	11.3	13.3	23.0	26.2	28.0
● 정부예산							
예산규모	205.3	309.1	325.4	342.0	355.8	375.4	386.4
성인지 예산 비율	3.7	3.3	3.5	3.9	6.5	7.0	7.2

주: 각 연도별 수치는 국회 확정안 기준이며, 2010회계연도의 경우 성인지예산 범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이 포함되어 기금을 제외한 정부예산 규모를 적시함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a, 내부자료)

성인지예산제도가 단순한 제도적 자리매김이 아닌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사업 선정 → 공감대 확산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의 질 제고 → 신뢰할 수 있는 성별 정보 산출 → 이를 활용한 적절한 분석 → 분석에 기반한 예산 변화’와 같은 순환구조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대상사업 선정’은 이러한 순환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제도로써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의 연계가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 대상사업의 적절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 도입 이후 지난 7년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전체 대상사업들의 운용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총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상사업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어떻게 요약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운용실태를 선정기준, 선정체계, 변동사항 및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제도 도입 시점인 2010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체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2010회계연도부터 2016회계연도까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대상사업의 연도별 변동사항은 어떠하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각 부처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살펴보았다²⁾.

두 번째 부분에서는 대상사업 운용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과 앞서 살펴본 운용실태에 기반한 문제점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서 보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문제점 분석결과에 근거를 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과제는 세 가지로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성인지예산 세부지침 개정(안), 상설협의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훈령 신설(안), 공무원의 제도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인지예산 작성지침 개정(안)이다.

2) 본 연구가 진행된 시점은 ‘2017년도 성인지예산 작성지침’에 기준해 각 부처가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중인 시점이므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체계는 2017회계연도까지 분석이 가능한 반면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은 2016회계연도까지 분석이 가능하다.

6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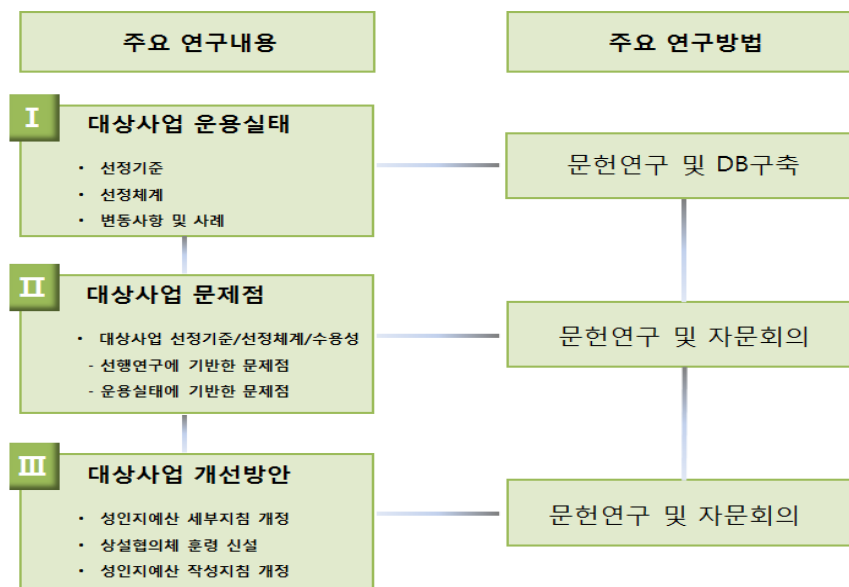
나.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체계, 변동사항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각 연도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및 세부지침, 매뉴얼, 관련 보고서 및 언론보도 내용, 국회 질의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2016년도 성인지예산서」상의 각 연도별 대상사업(총 1,982개)을 중심으로 DB를 구축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연도별 계속사업, 통·폐합 사업, 부처이관사업, 회계이관사업, 제외사업 등은 무엇 인지에 관한 변동사항을 검토하였다.

셋째,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의 문제점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그 내용을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자문회의는 개별 자문 방식으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약 2개월 동안 총 7명(공무원 3인,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내용과 방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1] 연구체계

II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1. 대상사업 선정기준	11
2. 대상사업 선정체계	17
3. 대상사업 변동사항	20
4. 대상사업 변동사례	31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의 주요 재정제도로 일반 예산 과정 안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제도의 핵심 요소인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 작성은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가 결산보고서 작성과 그 일정을 같이 하며, 성인지예산서는 정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성인지결산서는 결산 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 14개의 서류(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계속비에 관한 명세서,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중 9번째 첨부서류가 성인지예산서에 해당된다. 또한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정부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12개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중 7번째 부속서류가 성인지결산서이다(<표 II-1> 참조).

성인지예산서가 사업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라면, 성인지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의 수혜를 받았는지 또한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다(기획재정부 외, 2016b: p.6). 따라서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는 사업은 동일하며, 대상사업은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선정하게 된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절차 및 기한, 유의사항, 작성 대상사업, 작성 양식 등은 ‘당해 연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당해 연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서 제시된다.

본 장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체계를 중심으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 선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고(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회계연도), 연도별 대상사업 변동사항 및 각 부처별 변동사례를 살펴봄으로써(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회계연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운용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0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표 Ⅱ -1〉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국가회계법 제15조의2

구분	내용
국가재정법	<p>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 (생략)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당해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국가회계법	<p>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4. 이월명세서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7. 성인지결산서 8. 예비금 사용명세서 9. 「국가재정법」제53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10. 「국고금관리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11. 「국가재정법」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생략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16.07.07. 검색)³⁾

3)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1028&efYd=20150518#AJAX>

1. 대상사업 선정기준

‘일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제시된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표 II-2>와 같이 변화해 왔다. 2010회계연도 성인지예산 작성지침(기획재정부, 2009: p.48~56)을 보면, 성인지예산 선정기준은 ‘양성평등정책사업’과 ‘성별영향분석사업’,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양성평등정책사업’은 양성평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①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의 시행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 ②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권익증진사업, ③기타 자체 법령·계획 등에 근거한 양성평등사업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②의 여성권익증진사업은 교육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여성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저소득 모자가족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등 보호를 요하는 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에 관한 정책, 여성의 국제적 평화증진 운동 및 국제협력강화에 관한 정책,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으로 제시되어 있다. ③의 경우 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교과부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성별영향분석사업’은 원칙적으로 ‘양성평등정책사업’을 제외한 모든 예산사업이 대상이나 성인지예산서 작성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성별수혜분석이 용이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여지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라고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옥 외(2009)는 ‘양성평등정책사업’과 ‘성별영향분석사업’은 성인지적 접근에 있어서 예산의 규모, 성별 차이, 성별 수혜 등의 분석방법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리되어 분석되어야 하며(p.106~107), ‘성별영향분석사업’의 경우 ‘양성평등정책사업’에 비해 예산규모가 크고 사업의 유형과 범위가 넓어 사실상 ‘양성평등정책사업’보다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p.103).

12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표 II-2〉 연도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회계연도	대상사업 선정기준
20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성평등정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의 시행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 -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권익증진사업 - 기타 자체 법령·계획 등에 근거한 양성평등사업 2. 성별영향분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양성평등정책사업을 제외한 모든 예산사업이 대상이나, - 성별수혜분석이 용이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여지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201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의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는 예산사업 2. '1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3.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여지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201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의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는 예산사업 2. '11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3.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여지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201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2. '1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3.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여지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
201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2. '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3.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등 해당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중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여지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13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
201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2. '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3.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등 해당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중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여지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여성, 가족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 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등(추후 통보 예정인 체크리스트 활용) - '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

회계연도	대상사업 선정기준
2016	1.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2. '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3.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등 해당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중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여지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여성, 가족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 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등(추후 통보 예정인 체크리스트 활용) - '15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
2017	1.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2. '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3.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등 해당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중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여지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여성, 가족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 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등(추후 통보 예정인 체크리스트 활용) - '16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2009: p.48~56, 2010: p.42~47, 2011b: p.46~51, 2012b: p.47~51, 2013b: p.53~57, 2014b: p.98~102, 2015b: p.105~109, 2016b: p.105~110)의 '성인지예산' 부분을 요약 및 재구성

그러나 지침 상의 이러한 구분과는 달리 실제 성인지예산서 작성 과정에서 두 유형의 사업을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는 문제, 보육 분야 사업들에 대해 100% 여성 수혜사업으로 구분하는 문제, 개인이 아닌 가구나 집단과 같은 수혜자 분석단위의 문제(김영옥 외, 2009: p.106~107), '양성평등'이라는 개념 자체의 논란(조선주 외, 2012: p.38) 등이 불거지면서 2011회계연도부터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10년도 작성사업',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으로 선정기준이 변경되었다. 2010회계연도의 선정기준이었던 여성권익증진사업, 기타 법령·계획 등에 근거한 양성평등사업은 사실상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국가의 성평등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전제한 결과이다(조선주 외, 2013: p.4).

2011회계연도의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전년도 작성사업',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구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⁴⁾. 반면 하위 기준들은 약간씩 변화하며 추가되었는데, 우선

14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3회계연도부터는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예산사업이 포함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다. 이는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이었으며, 2017회계연도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현재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의 비율은 <표 II-3>과 같다.

〈표 II-3〉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 작성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사업수		97	124	107	96
예산액		1,768,848	2,554,098	1,800,180	5,603,867
성인지예산서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이 차지하는 비율(%)	사업수	35.3	36.6	31.2	28.9
	예산액	13.7	11.4	6.9	20.2

주: ‘구분’의 연도는 회계연도이며, 김효주 외(2015: p.43)의 출판본 자료를 기준으로 관련된 부분만 발췌함

자료: 김효주 외(2015: p.43)

2014회계연도부터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이 대상사업에 포함되었는데,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넘어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포함하는 특징을 가진다(김영옥 외, 2012: p.38)⁴⁾. 이에 2013회계연도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수가 54개였던 반면 2014회계연도의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수는 96개로 증가하였다(조선주 외, 2014b: p.11). 또한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의 하위 기준이 ‘국정과제 등 해당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중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여지가 큰 사업을

4) 2010회계연도와 2011회계연도를 비교해 보면, 상기 제시한 대상사업 선정기준 외에 대상사업의 범위가 확대된 점(2010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포함하였으나 2011회계연도부터는 ‘기금’까지 포함)을 차이점으로 들 수 있다.

5) 실제로 2014회계연도의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96개 중 직접 여성에게 수혜가 가는 사업(예시: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여성발명진흥 등)은 16개에 지나지 않는다(조선주 외, 2013: p.4).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정과제 등 정부 주요 사업이 포함되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 및 예산에 대해서도 성평등 효과 분석이 가능해졌다(조선주 외, 2013: p.17).

2015회계연도에는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에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는 [그림 Ⅱ-1]에 나타나 있다. 각 부처에서는 세 가지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외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부처의 예산사업들을 검토,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필요한 대상사업을 추가 발굴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역시 성인지예산서 작성 주체인 각 부처의 수동적인 자세를 지적하는(국회예산정책처, 2012a: p.27) 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16회계연도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2015회계연도와 동일하였다.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① 단계 : 사업에 '여성' 을 나타내는 명칭 포함		
<input type="checkbox"/> ↓ No	<input type="checkbox"/> Yes ⇒	성인지예산서 작성
② 단계 : 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		
<input type="checkbox"/> ↓ No	<input type="checkbox"/> Yes ⇒	성인지예산서 작성
③ 단계 : 여성, 가족과 밀접한 분야		
<input type="checkbox"/> ↓ No	<input type="checkbox"/> Yes ⇒	성인지예산서 작성
④ 단계 : 여성·가족을 주요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성 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		
<input type="checkbox"/> ↓ No	<input type="checkbox"/> Yes ⇒	성인지예산서 작성
⑤ 단계 : 상기 이외에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위탁 사업 포함)		
<input type="checkbox"/> ↓ No	<input type="checkbox"/> Yes ⇒	성인지예산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외(2016b: p.11)

[그림 Ⅱ-1]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2017회계연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기준이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16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추진사업' 기준으로 변화하였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 기존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연속성은 유지하면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구조화된 성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는데 특징이 있다(여성가족부, 2015: p.20). 이러한 특징과 차이는 <표 II-4>에 잘 제시되어 있다.

<표 II-4>의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의 관계를 보면 두 정책의 정책 목표는 양성평등 실현으로 동일하지만 정책의 접근 방식 및 주요 정책, 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정책이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에 중점을 두고 성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집중하였다면, 양성평등정책은 그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성 불평등을 초래하는 구조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차인순(2015: p.4~5)은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의 달성을 위하여 크게 두 가지 방향(성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과 성평등을 촉진시키는 것)을 구조화하고 있으며, 두 개의 축 어느 한쪽만으로는 양성평등을 달성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2010회계연도의 선정기준이었던 '양성평등정책사업' 기준이 2011회계연도 이후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으로 약간 축소된 듯 하였으나 2017회계연도에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그 의미와 범위가 다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표 II-4>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정책의 관계

구분	여성정책	양성평등정책
접근방식	여성특화적 접근 - 남성보다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의 상황을 우선 개선하여 양성평등 실현 -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에 중점	남녀 모두를 고려한 접근 - 성 불평등 구조 개선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 - 남녀 모두의 문제(남성문제 포괄)
주요정책	여성 지원을 위한 정책·제도 - 경력단절여성 지원, 여성 폭력 예방 등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제도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교육·통계 등
참여	여성의 주도적 참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참여 강조

자료: 여성가족부(2015: p.21)

2. 대상사업 선정체계

성인지예산 작성절차를 보면, 우선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을 협의하여 각 부처로 ‘일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세부지침’을 배포하면, 해당 부처는 작성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요구안과 함께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각 부처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성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된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지침을 배포하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선정되며, 마지막 국회 제출 전 최종 조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대상사업 선정 및 조정 과정은 제도 도입 이후 큰 틀은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지만, 세부 내용은 변화해 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5〉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일정

시기	내 용
3월	○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작성·배포 (기획재정부 → 해당 부처, 여성가족부 협조) - 「각 연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포함
4~5월	○ 대상사업 선정 및 확정(해당 부처) -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 대상사업 적합성 여부 검토(여성가족부) -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대상사업 조정(기획재정부) ○ 성인지예산서 작성교육 및 지원(여성가족부) - 해당 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 및 사업담당자 교육 실시(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 성인지예산서 제출·취합(해당 부처 → 기획재정부)
6~8월	○ 해당 부처 성인지예산서 검토(기획재정부)
9월	○ 성인지예산서 국회 제출(기획재정부 → 국회) -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인지예산서 국회 제출

자료: 기획재정부 외(2016b: p.14)

우선 대상사업의 선정 방식이다. 2010회계연도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여성부가 협의하에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기준 및 대상사업은 별도 통보’하였다(마경희 외, 2009: p.19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표 II-2>의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1차적으로 예비대상사업 목록을 작성하여 각 부처에 송부하고, 이에 대한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사업은 총 210개였으나, 이후 예산과목개편 및 기획재정부의 내부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195개의 사업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마경희 외, 2009: p.32). 이와 같은 대상사업 통보 방식은 2014회계연도까지 유지되었으며, 2015회계연도부터는 ‘일률적 선정기준에 맞춰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하향식으로 확정·통보하는 방식’에 대한 지적(국회예산정책처, 2013b: p.31)에 따라 작성기준은 제시하되 대상사업 목록을 부처에 별도 통보하지는 않고 있다.

다음은 대상사업의 조정 방식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기존에는 부처에서 제출한 작성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일괄적으로 내부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조정하였으나, 2013회계연도부터는 부처가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적합성 여부를 검토, 해당 부처와 대상사업을 조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산림청의 ‘숲 가꾸기’, 국세청의 ‘조세박물관 운영’ 등의 9개 사업이 부적절한 사업으로 제외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2a: p.8).

2014회계연도부터는 대상사업 적절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3단계의 대상사업 선정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국가재정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2단계에서는 각 중앙관서가 제출한 대상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관계부처에 송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14개 부처 60개 사업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검토방식은 서면검토 방식이었다. 3단계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의 최종 검토 하에 부적절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해당 부처와 의견을 조정, 제외하였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등 3개 부처의 4개 사업이 제외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3a: p.10).

2015회계연도 역시 3단계의 대상사업 선정체계에 따라 대상사업이 조정

되었는데, 1단계에서는 2014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국가재정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한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제시되고, 이와 함께 [그림 II-1]의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개발되어 부처의 자발적인 대상사업 발굴을 유도하였다. 당시 체크리스트를 통해 발굴된 사업은 3개 부처 6개 사업이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14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를 미작성한 9개 부처의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대상사업이 발굴된 3개 부처(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법제처)에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독려한 바 있다. 이에 2개 기관(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이 '15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였다(조선주 외, 2014b: p.27). 2단계에서는 8개 부처 38개 사업에 대하여 적절성에 관한 서면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최종 조정단계인 3단계에서는 상설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대상사업 담당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협의·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상사업을 조정하였다(조선주 외, 2014b: p.21).

기획재정부는 2014년 6월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통계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성인지예·결산 공식협의기구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이용원, 2014: p.72), 상설협의체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성인지예·결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 지침개정 협의,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및 적절성 등 검토, 성인지예산서 정부안 최종 점검, 기타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발전방안 협의 등이다(이용원, 2014: p.76).

2016회계연도부터는 상설협의체를 통한 대상사업 심의·검토과정을 제도화함으로써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성을 높이려 노력하였다. 1단계는 2015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체크리스트가 함께 제시되었으며, 체크리스트로 발굴된 대상사업은 5개 부처 7개 사업이었다(최진호, 2015: p.277). 또한 기존 서면검토로 이루어지던 2단계 대상사업 검토 과정을 상설협의체의 검토 방식으로 개선하여 8개 부처 34개 사업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3단계 역시 상설협의체 회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최종 검토하였다. 그 결과 1개 부처 1개 사업이 제외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5a: p.9).

〈표 II-6〉 체크리스트를 통해 발굴된 신규 대상사업

회계연도	부처명	사업명
2015	외교부	동티모르(ODA)
	안전행정부	아름다운화장실조성
	안전행정부	연수원수입대체경비(자치단체여성리더양성심화과정운영)
	안전행정부	세종청사유지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전력기금)(R&D)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현장여성R&D인력참여확산기반구축(R&D)
2016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보수등
	외교부	중남미지역 비중점 국가그룹(ODA)
	외교부	팔레스타인(ODA)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국토교통부	철도핵심인력양성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알리기및국제협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자료: 이용원(2014: p.71), 최진호(2015: p.277)

3. 대상사업 변동사항

이번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체계에 기반하여 실제 선정된 대상사업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상사업 변화는 2010회계연도 이후 각 연도별 성인지예산서(대한민국정부, 2009, 2010a, 2011a, 2012a, 2013a, 2014a, 2015a)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대한민국정부, 2010b, 2011b, 2012b, 2013b, 2014b, 2015b)의 각 부처별 사업총괄표를 토대로 부처별 대상사업 DB를 구축, 추가, 제외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분석하였다. '17년도 성인지예산서가 현재 작성 중이므로 분석 기간은 2010회계연도에서 2016회계연도까지이며, 작성부처 및 대상사업 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표 II-7>의 성인지예산서 작성부처 현황을 살펴보면, 2010회계연도 29개 부처에서 2011회계연도 34개, 2012회계연도 34개, 2013회계연도 34개, 2014회계연도 42개, 2015회계연도 42개, 2016회계연도 43개 기관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010회계연도 이후 꾸준히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 온 부처는 '16 회계연도 기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24개 부처이다.

변동사항을 보면 2011회계연도의 경우, 2010회계연도에 비해 국회,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6개 기관이 추가된 반면 기상청은 제외되었다. 2010년 5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기금사업까지 대상사업으로 포함됨에 따라 작성부처의 수가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2011회계연도의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한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문화재청으로 이 중 국가보훈처만이 기금사업 포함으로 추가된 기관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2011회계연도의 작성기관의 추가는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표 II-2>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3가지 기준으로 변화하면서 해당 대상사업이 증가하고(2010회계연도 대상사업 수는 195개, 2011회계연도 대상사업 수는 245개) 부처 역시 함께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제외 기관인 기상청의 경우 2010회계연도에 작성하였던 '수치예보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 1개가 제외되면서 2011회계연도에는 성인지예산서를 미작성하였다.

2012회계연도를 보면, 2011회계연도와 총 부처수는 동일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외되고 대법원이 추가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회계연도에 성인지예산서를 처음 작성한 부처였으나, 당시 작성하였던 '다문화가족 소비자교육 콘텐츠개발 및 교육', '민간소비자단체 참여 프로그램' 2개 사업이 2011년 모두 종료되며 2012회계연도에는 다시 제외부처가 되었다.

2013회계연도에는 법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제외되고 방송통신위원회, 관세청이 추가되었다. 법제처의 경우 2010회계연도 이후 작성해왔던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 서비스' 사업이 성별수해분석의 실익이 낮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역시 작성해오던 1개 사업이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제외부처가 되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관세청의 경우 각각 1개 사업에 대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추가 부처가 되었다.

22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표 II -7〉 2010회계연도~2016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부처 현황

작성부처		전년대비 추가부처	전년대비 제외부처
●2010 회계연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 29개 부처			
●2011 회계연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회,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총 34개 부처			
●2012 회계연도			
국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총 34개 부처			
●2013 회계연도			
국회, 대법원,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관세청	법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 34개 부처			

Ⅱ.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 23

작성부처		전년대비 추가부처	전년대비 제외부처
●2014 회계연도			
	국회, 대법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인권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병무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방송통신위원회
	총 42개 부처		
●2015 회계연도			
	국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	헌법재판소, 금융위원회
	총 42개 부처		
●2016 회계연도			
	국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국민안전처	해양경찰청
	총 43개 부처		

주: 작성부처명은 각 회계연도 기준임

자료: 김효주 외(2015: p.28~29)

24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4회계연도의 경우 2013회계연도 34개 부처 275개 사업에서 42개 부처 339개 사업으로 작성부처의 수 및 대상사업 수가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하였다.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에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으로 변경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의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면서 대상사업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8〉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 수 현황

(단위: 개, %)

회계연도	'11	'12	'13	'14	'15	'16
여성정책 기본계획	58	57	54	96	117	111
성인지예산서 차지비율	23.7	22.4	19.6	28.3	34.1	33.4
성별영향 분석평가	-	-	97	124	107	96
성인지예산서 차지비율	-	-	35.3	36.6	31.2	28.9

주: 김효주 외(2015: p.42~43)의 출판본 자료를 기준으로 관련된 부분만 발췌함
자료: 김효주 외(2015: p.42~43)

또한 2014회계연도에는 조직개편과 함께 기존의 1개 사업이 기존 부처 1개와 신설 부처 1개로 나누어지며 대상사업 수와 부처 수가 함께 증가하는 결과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3회계연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이 2014회계연도에는 교육부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과 미래창조과학부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으로 나누어졌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업경영체등록’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등록’ 사업과 해양수산부의 ‘어업경영체등록’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의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사업과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 전문인력양성지원’ 사업으로 나누어진 바 있다.

2015회계연도는 2014회계연도 대비 총 부처수의 변동은 없었으나 법제처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가되고 헌법재판소와 금융위원회가 제외되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법제처와 방송통신위원회 추가 작성은 여성가족부의 미작성

Ⅱ.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 25

부처 독려에 따른 결과였으며, 헌법재판소와 금융위원회는 각각 1개 사업이 대상사업이었으나, 이들 사업이 사업종료 등의 이유로 제외되면서 제외부처가 되었다. 2016회계연도에는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제외되고 국민안전처가 추가되었으며, 헌법재판소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규사업을 발굴하며 성인지예산서 작성 부처로 들어오게 되었다.

지금까지 성인지예산서 작성 부처의 변동 내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는 작성부처의 변동은 주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수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대상사업 수가 적은 부처에서 잦은 변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음 <표 Ⅱ-9>와 <표 Ⅱ-10>의 음영이 있는 부분은 앞의 <표 Ⅱ-7>에서 변동이 이루어졌던 부처들이다. 2014회계연도에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부활된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들은 모두 대상사업 수가 2개 이하의 부처였다.

〈표 Ⅱ-9〉 성인지예산서 작성 회계연도별·부처별 현황①

(단위: 개, 백만원)

부처	2010회계연도		2011회계연도		2012회계연도		2013회계연도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계	195	7,314,447	245	10,174,846	254	10,704,245	275	12,913,672
국회	-	-	1	8,264	1	8,264	1	9,113
대법원	-	-	-	-	2	52,438	2	51,103
헌법재판소	-	-	-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	-	-	-	-
기획재정부	1	457	2	3,000	3	3,317	1	480
교육부	19	666,058	17	824,442	14	593,189	14	1,262,602
미래창조과학부	-	-	-	-	-	-	-	-
외교부	1	37,560	8	42,649	10	135,393	12	173,099
통일부	2	62,282	2	12,847	2	17,599	3	21,845
법무부	5	34,626	7	42,722	12	74,484	13	90,171
국방부	3	1,394	3	4,570	3	11,907	5	41,767
행정자치부	10	32,758	9	20,682	10	74,357	9	64,233
문화체육관광부	14	72,210	23	112,132	23	136,103	24	159,125
농림축산식품부	22	215,293	27	233,739	22	172,447	26	152,836

26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부처	2010회계연도		2011회계연도		2012회계연도		2013회계연도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산업통상자원부	4	63,764	3	36,056	3	38,458	4	59,679
보건복지부	27	5,084,254	33	6,101,851	34	6,626,344	28	7,585,040
환경부	5	31,027	7	27,263	7	28,615	7	27,965
고용노동부	11	456,974	22	1,929,814	26	1,898,987	33	2,204,435
여성가족부	28	67,682	29	203,063	31	238,189	38	352,020
국토교통부	7	18,889	6	50,550	5	49,706	5	50,525
해양수산부	-	-	-	-	-	-	-	-
국민안전처	-	-	-	-	-	-	-	-
법제처	1	828	1	795	1	810	-	-
국가보훈처	-	-	1	18,611	2	27,998	4	53,655
식품의약품안전처	-	-	1	2,838	2	4,500	2	4,925
국가인권위원회	2	95	2	77	2	139	2	171
방송통신위원회	-	-	-	-	-	-	1	2,073
공정거래위원회	-	-	1	249	-	-	-	-
금융위원회	1	2,500	1	1,700	1	1,350	1	1,505
국민권익위원회	-	-	1	9	1	29	1	28
원자력안전위원회	-	-	-	-	-	-	-	-
국세청	2	3,553	1	115	1	115	1	21
관세청	-	-	-	-	-	-	1	1,228
조달청	1	190	1	190	1	190	2	851
통계청	1	1,421	3	13,620	1	1,212	1	1,193
병무청	-	-	-	-	-	-	-	-
경찰청	-	-	1	856	2	1,290	3	20,500
문화재청	1	3,479	3	18,162	3	15,397	3	10,698
농촌진흥청	11	23,937	10	21,327	11	29,535	11	29,350
산림청	2	38,050	2	34,245	4	28,881	4	23,393
중소기업청	8	399,398	10	401,060	9	426,844	9	452,827
특허청	3	4,234	3	4,925	3	5,112	3	4,639
기상청	1	400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766	1	1,785	1	766	-	-
해양경찰청	1	388	3	638	1	280	1	577

Ⅱ.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 27

〈표 Ⅱ-10〉 성인지예산서 작성 회계연도별·부처별 현황②

(단위: 개, 백만원)

부처	2014회계연도		2015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계	339	22,434,921	343	26,062,622	332	27,760,229
국회	1	10,254	1	10,321	1	10,984
대법원	2	53,642	2	50,080	2	71,915
헌법재판소	1	185	-	-	1	1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68	1	168	1	168
기획재정부	2	8,792	1	8,323	1	10,780
교육부	9	274,667	7	59,444	8	62,541
미래창조과학부	8	458,946	11	510,994	11	542,112
외교부	11	184,242	12	185,878	15	192,204
통일부	4	34,601	5	50,266	5	44,920
법무부	12	78,835	12	83,688	12	89,171
국방부	4	29,876	5	30,608	6	38,322
행정자치부	7	59,347	10	53,466	9	59,315
문화체육관광부	24	183,776	27	208,318	22	217,451
농림축산식품부	22	462,828	18	462,417	14	309,709
산업통상자원부	4	37,466	6	46,789	7	142,821
보건복지부	30	11,214,903	37	13,720,395	40	14,314,588
환경부	5	26,648	5	25,496	5	26,364
고용노동부	45	2,465,371	44	3,665,155	41	4,143,920
여성가족부	53	438,953	51	493,728	40	498,383
국토교통부	11	1,962,024	11	1,159,339	11	1,244,535
해양수산부	14	30,816	10	32,756	10	22,181
국민안전처	-	-	-	-	1	1,864
법제처	-	-	1	306	1	287
국가보훈처	4	57,219	4	58,427	4	61,794
식품의약품안전처	3	31,858	2	42,042	3	45,645
국가인권위원회	2	171	2	163	2	163

28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부처	2014회계연도		2015회계연도		2016회계연도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방송통신위원회	-	-	1	1,089	1	1,238
공정거래위원회	1	480	1	73	1	73
금융위원회	1	45	-	-	-	-
국민권익위원회	1	28	1	20	1	17
원자력안전위원회	1	6,500	2	6,700	1	200
국세청	1	21	1	21	1	21
관세청	2	1,508	2	2,129	2	2,252
조달청	1	762	1	724	1	1,050
통계청	1	1,230	1	1,770	1	2,078
병무청	1	112	1	127	1	9,884
경찰청	4	25,280	4	25,467	4	24,023
문화재청	3	11,189	3	12,245	4	28,893
농촌진흥청	10	23,652	9	24,131	8	21,593
산림청	6	56,757	2	15,713	1	9,971
중소기업청	20	4,166,777	21	4,983,243	21	5,424,770
특허청	3	4,641	3	4,589	4	4,713
기상청	1	770	3	16,370	5	45,77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28,704	1	8,222	2	31,423
해양경찰청	1	877	1	1,422	-	-

주: 각 연도 예산액은 정부안 기준임

‘-’ 표시는 연도 및 기관별 해당 사업 및 예산금액이 없음을 의미함

자료: 김효주 외(2015: p.30~33)

다음으로 대상사업 수의 회계연도별 변동사항을 보면 <표 II-11>과 같다. 변동사항에 관해 구축된 자료의 한계로 2012회계연도 이후의 변동 내역을 살펴보았는데, 각 회계연도별 전년대비 변동사업 수는 '12회계연도 9개, '13회계연도 21개, '14회계연도 64개, '15회계연도 4개, '16회계연도 12개로 나타났다. 실제 제외와 추가사업 수를 보면 상당히 많은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가사업의 경우 사업이 분할되거나 조직개편 시 부처이관으로 인해 추가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선정기준이 주요 요인이었다. 2012 회계연도의 경우 전체 추가사업 수는 31개였으며 이 중 사업이 분할된 5개를 제외한 26개가 선정기준에 의한 것이었는데, 대부분은 '10년 성별영향평가 중점과제인 일자리 및 안전사업(24개, 대한민국정부, 2011a: p.3)이 포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3회계연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선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31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이 추가로 선정된 바 있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기준이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으로 변경된 2014회계연도 역시 선정기준으로 인해 76개의 대상사업이 추가되었으며, 체크리스트가 개발된 2015회계연도 이후에는 적지만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규 대상사업들이 발굴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제외사업의 경우 예산미편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종료된 경우와 사업간의 통·폐합이 주요 요인으로 보이며, 사업간 통·폐합의 비율은 2015회계연도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또한 해마다 대상사업 부적절을 사유로 제외된 사업들이 있었는데, 2013회계연도와 2015회계연도에 그 비율이 유독 높게 나타났으며, 2015회계연도에는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미작성한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 대상사업 수 변동사항

회계연도	전년대비 변동사업 수	제외	추가
2012	·총 9개 - 제외: 22개 - 추가: 31개	·총 22개 - 사업종료: 15개 - 부처이관: 5개 - 사업통·폐합: 1개 - 부적절: 1개	·총 31개 - 사업분할: 5개 - 선정기준: 26개
2013	·총 21개 - 제외: 18개 - 추가: 39개	·총 18개 - 사업종료: 7개 - 부적절: 8개 - 사업통·폐합: 3개	·총 39개 - 선정기준: 39개
2014	·총 64개 - 제외: 19개 - 추가: 83개	·총 19개 - 선정기준: 3개 - 사업종료: 5개 - 부적절: 4개 - 부처이관: 1개 - 사업통·폐합: 6개	·총 83개 - 부처이관: 4개 - 사업분할: 3개 - 선정기준: 76개
2015	·총 4개 - 제외: 40개 - 추가: 44개	·총 40개 - 사업통·폐합: 17개 - 사업종료: 7개 - 부적절: 12개 - 부처자채미작성: 4개	·총 44개 - 선정기준: 38개 - 체크리스트: 6개
2016	·총 12개 - 제외: 36개 - 추가: 24개	·총 36개 - 사업종료: 11개 - 사업통·폐합: 19개 - 부적절: 4개 - 부처이관: 1개 - 부처개편: 1개	·총 24개 - 선정기준: 16개 - 체크리스트: 7개 - 부처개편: 1개

주: 제외 및 추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제외 및 추가 항목의 총 사업수가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대한민국정부(2011a: p.3)에서는 '12회계연도의 제외사업 수를 부처이관을 제외한 17개, 추가사업 수를 사업분할을 제외한 26개로 제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정부(2013a: p.4)에서는 '14회계연도 제외사업 수를 사업종료 및 부처이관, 사업통폐합만을 포함한 12개, 추가사업 수를 부처이관 및 사업분할을 제외한 76개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대한민국정부(2015a: p.4)에서는 '16회계연도 제외사업 수를 정부안 기준(35개)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본 표에서는 국회확정안 기준(36개)으로 제시하고 있음.

본 표에서는 상기 제시한 기준에 의해 변동사업 수를 일괄 재작성함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b, 내부자료)

4. 대상사업 변동사례

본 절에서는 2010회계연도에서 2016회계연도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대상사업 변동이 잦았던 교육부와 비교적 대상사업 변동이 적었던 문화체육관광부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상사업 변화는 각 연도별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대한민국정부, 2009, 2010a, 2010b, 2011a, 2011b, 2012a, 2012b, 2013a, 2013b, 2014a, 2014b, 2015a, 2015b)의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총괄표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가. 교육부

교육부는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 왔으며, 대상사업 수는 <표 Ⅱ-9>와 <표 Ⅱ-10>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2010회계연도 19개, 2011회계연도 17개, 2012회계연도 14개, 2013회계연도 14개, 2014회계연도 9개, 2015회계연도 7개, 2016회계연도 8개로 변해왔다. 기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 2014회계연도에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사업이 나누어져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게 됨에 따라, 2014회계연도 이후 대상사업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2010회계연도 이후 계속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 온 사업은 ‘대학평가 및 운영-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사업’,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ASEM-DUO 장학사업, 한미교육위원단지원’, ‘인문사회 기초연구(R&D)’ 네 개이다⁶⁾. 이 중 ‘대학평가 및 운영-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사업’의 2010회계연도 사업명은 ‘대학의 여성인력 참여확대 및 능력증진’이었으며, 해당 사업이 2013회계연도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작성되어 오다가 2016회계연도에 ‘대학평가 및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변경되었다.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2010회계연도의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 사업이 통합되어 현재까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 중이다. ‘인문사회 기초연구(R&D)’ 사업은 2010회계연도 당시 사업명은

6) 각 사업명은 2016회계연도 기준이다.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였으나 2012회계연도부터 현재와 같이 사업명이 변했다.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은 큰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 오고 있다. 상기 네 개의 사업 외의 사업은 다양한 이유로 제외되거나 타 부처로 이관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0, 2011회계연도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였던 ‘정부초청 해외 영여 봉사 장학생’ 사업과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촉진’ 사업은 지방 교육청으로 이관되며 2012회계연도에 제외되었으며,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사업은 2011년 사업종료로,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은 2012년 사업종료로 제외되었다. 2010회계연도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였던 ‘여성공학 기술 인력양성(WATCH21)’ 사업은 ‘WISE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2011회계연도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이 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사업은 2011회계연도의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설치운영’ 사업과 다시 통합되어 2012회계연도부터는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R&D)’ 사업으로 작성되었으며 2014회계연도부터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어 미래창조과학부의 대상사업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 오고 있다.

교육부 대상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2014회계연도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변동이었는데,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의 이공계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누어져 이관되었으며 ‘국제 연구인력 교류’ 사업 역시 교육부의 ‘국제 연구인력 교류(R&D)’ 사업과 미래창조과학부의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R&D)’ 사업으로 나누어져 작성되었다. 이후 2016회계연도에 교육부의 ‘대학 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R&D)’ 사업은 사업통·폐합으로 제외되었으며,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상사업이었던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R&D)’,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손익계정)’, ‘중견연구자지원(R&D)’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다.

그 외 ‘한국장학재단 출연’, ‘의과학자 육성지원’ 사업은 사업 내용 변경으로 작성실익이 낮다고 판단되어 제외되었다. 반면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과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의 경우 2014회계연도, 2015회계연도 모두 대상사업 제외요청을 하였으며, 2015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표 II -12〉 교육부 대상사업 변동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교육과학기술부】 우수학생 국기장학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우수학생 국기장학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우수학생 국기장학 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우수학생 국기장학 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우수학생 국기장학 사업 • 대통령과학장학생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미래창조과학부】 우수학생 국기장학 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우수학생 국기장학금지원
【교육과학기술부】 국제연구인력 교류	【교육과학기술부】 국제연구인력 교류	【교육과학기술부】 국제 연구인력 교류	【교육과학기술부】 국제 연구인력 교류	【교육부】 우수학생 국기장학 사업	-	-
【교육과학기술부】 국제연구인력 교류	【교육과학기술부】 국제연구인력 교류	【교육과학기술부】 국제 연구인력 교류	【교육과학기술부】 국제 연구인력 교류	【미래창조과학부】 국제 연구인력 교류(R&D)	【미래창조과학부】 국제 연구인력 교류(R&D)	【미래창조과학부】 국제 연구인력 교류(R&D)
-	-	【교육과학기술부】 장애학생교육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장애학생교육지원	【교육부】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 (R&D)	【교육부】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 (R&D)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장애학생교육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장애학생교육지원	【교육부】 장애학생교육지원	【교육부】 장애학생교육지원	【교육부】 장애학생교육지원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 4년제 대학생 인턴십 지원	• 4년제 대학생 인턴십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	• 전문대학생 해외 현장실습 지원 • 한미대학생 연수취업 (WEST) 프로그램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34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의 여성인력 참여 확대 및 능력증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의 여성인력 참여 확대 및 능력증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의 여성인력 참여 확대 및 능력증진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교육부】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교육부】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교육부】 대학평가 및 운영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 계획 평가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의과학자 육성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의과학자육성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의과학자 육성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의과학자 육성 지원	【교육부】 의과학자 육성 지원	-	-
【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 • 학문후속세대 양성 • 보 호학문분야 강의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 • 학문후속세대양성 • 보 호학문분야 강의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기초연구 •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기초연구 • 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	【교육부】 인문사회 기초연구 •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교육부】 인문사회 기초연구(R&D) •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교육부】 인문사회 기초연구(R&D) • 학문후속세대지원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교육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생 국내외 봉사활동 지원 • 대학생 국내외봉사활동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출연 • 대학생 국내외봉사활동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출연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출연	-	-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교육협력 지원 사업 • ASEM 장학협력 • 한미교육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교육협력지원사업 • ASEM 장학협력 • 한미교육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 (비ODA) • ASEM-DUO 장학협력 • 한미교육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 (비ODA) • ASEM-DUO 장학사업 • 한미교육위원회 지원	【교육부】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 (비ODA) • ASEM-DUO 장학사업 • 한미교육위원회 지원	【교육부】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 (비ODA) • ASEM-DUO 장학사업 • 한미교육위원회 지원	【교육부】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 (비ODA) • 글로벌 교육교류사업 (비ODA)/ ASEM-DUO장학사업 • 글로벌 교육교류사업 (비ODA)/ 한미교육위원회지원

II.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 3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	-	-	-	【교육부】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원	【교육부】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	【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	-	-	-	-
【교육과학기술부】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	-	-	-	-	-
【교육과학기술부】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	-	-	-	-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촉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촉진	-	-	-	-	-
-	-	-	-	-	-	【교육부】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 교과용도서 심의회 운영
-	-	-	-	-	-	【교육부】 지역형성교육활성화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 (R&D)	【미래창조과학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 (R&D)	【미래창조과학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 (R&D)	【미래창조과학부】 이공계 전문기술 연구인력 양성(R&D)

36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관전시전문인력양성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관전시전문인력양성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관전문인력양성 (손익계정)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관전문인력양성 (손익계정)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관전문인력양성 (손익계정)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관전문인력양성 (손익계정)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관전문인력양성 (손익계정)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과학기술 인력양성 (WATCH21)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R&D)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R&D)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R&D)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R&D)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R&D)
【교육과학기술부】 WISE 프로그램 지원						
-	-	-	【교육과학기술부】 중견 연구자 지원(R&D)	【미래창조과학부】 중견 연구자 지원(R&D)	【미래창조과학부】 중견 연구자 지원(R&D)	【미래창조과학부】 개인연구지원(R&D) • 중견연구지원

주: 사업명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총괄표 기준임

자료: 각 회계연도별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대한민국정부, 2009, 2010a, 2010b, 2011a, 2011b, 2012a, 2012b, 2013a, 2013b, 2014a, 2014b, 2015a, 2015b)의 교육부 사업총괄표

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 왔으며, 대상사업 수는 <표 II-9>와 <표 II-10>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2010회계연도 14개, 2011회계연도 23개, 2012회계연도 23개, 2013회계연도 24개, 2014회계연도 24개, 2015회계연도 27개, 2016회계연도 22개로 변해왔다. 2010회계연도에서 2011회계연도로 넘어가면서 대상사업 수가 많이 증가하였는데, 인턴사업 중심으로 예산사업이 6개, 기금사업이 3개 증가하였다. 교육부처럼 조직개편 등의 영향은 없었지만 사업종료나 통·폐합 등의 변화가 있었다.

2010회계연도 이후 꾸준히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 온 사업은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양성(R&D)’, ‘방송영상산업인력 양성’, ‘문화정책개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예술인력육성’, ‘문화 예술교육 활성화’,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등으로 비교적 계속 작성사업이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⁷⁾. 2011회계연도 작성사업이었던 ‘다문화사회 문화 환경 조성’ 사업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제외되었으며, 2010, 2011회계연도의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은 2011년 사업종료로 제외된 바 있다. 2010회계연도부터 꾸준히 작성해 온 ‘문화동반자사업(ODA)’은 2015회계연도에, ‘예술 교류 활성화’ 사업은 2016회계연도에 각각 상설협의체의 협의 결과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제외되었다. 2016회계연도에는 기존 ‘민속국악원 운용’, ‘남도국악원 운용’, ‘부산국악원 운용’ 사업이 ‘국립지방국악원 운용’ 사업으로 통·폐합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들은 대체로 전년도 작성사업이 많으며, 신규사업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이나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상사업이 발굴된 적은 없었다. 또한 대상사업에 대한 제외요청은 있었으나 검토 결과에 대한 수용력은 높은 편이었다.

7) 작성 사업명은 2016회계연도 사업명이며, 제시된 사업들은 계속 작성사업이기는 하나 작성 과정에서 사업명 변경이나 사업 통합 등의 변경은 있었다.

〈표 II-13〉 문화체육관광부 대상사업 변동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문화콘텐츠 인제양성 •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3D 전문인력 양성	문화콘텐츠 인제양성 •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3D 전문인력 양성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3D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R&D)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R&D)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R&D)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R&D)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R&D)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R&D)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R&D)
비즈니스 산업인력 양성	비즈니스 산업인력 양성	비즈니스 산업인력 양성	비즈니스 산업인력 양성	비즈니스 산업인력 양성	비즈니스 산업인력 양성	비즈니스 산업인력 양성
-	-	-	-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 환경 개선 • 무지개다리사업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 환경 개선 • 무지개다리 사업 • 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 환경 개선 • 무지개다리 사업 • 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	-	-	-	-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 • 남북문화 상호이해 제고	남북 문화 상호이해 제고
국립발레단 운영 • 남상무용수 활성화 및 부상방지를 위한 재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	-	-	-	-	-
-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 공동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 도서관개관시간연장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II.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 3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정리유물등록 및 자료 정리 • 박물관 아카이징으로 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 • 아카이징을 통한 관람향 유권 확대 					
문화정책 개발	문화정책개발	문화정책개발	문화정책개발	문화정책개발	문화정책개발	문화정책개발
•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지방문화원 아르신 문화프로 그램 운영	지방문화원 아르신 문화프로 그램 운영	지방문화원 아르신 문화프로 그램 운영	지방문화원 아르신 문화프로 그램 운영	아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아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아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	-	-	-	-
	• 이주민공동체 문화활동 지원					
문화동반자 사업	문화동반자 사업	문화동반자사업(ODA)	문화동반자사업(ODA)	문화동반자사업(ODA)	-	-
-	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	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	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	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 디자인 문화전문인력양성	• KODF 아카데미	• 공예디자인전문인력 양성	• 공예디자인전문인력 양성	• 공예디자인전문인력 양성	• 공예디자인전문인력양성
문화예술기관 인터넷도 활성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	예술인력 육성	예술인력 육성	예술인력 육성
미술관운영 지원	미술관 운영 지원	미술관 운영지원	미술관 운영지원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육성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지원
• 등록미술관 운영 지원	• 등록미술관 확대인력 지원	• 등록미술관 확대인력 지원	• 등록미술관 확대인력지원	-	-	-

40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	-	-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부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부조)						
스포츠타임 육성 • 스포츠타임 현장인력 재교육	스포츠타임 육성 • 스포츠타임 현장인력 재교육	-	-	-	-	-
아시아 예술계 인력양성 및 지원	아시아 예술계 인력양성 및 지원	아시아 예술계 인력양성 및 지원	아시아 예술계 인력양성 및 지원	아시아 예술계 인력양성 및 지원	예술교류 활성화 • 아시아 예술계 인력양성	-
-	공연활동지원 • 문화예술인턴	공연활동 지원 • 문화예술인턴 운영	국립극장 전속단체운영 • 전속단체연수단원운영	국립극장 전속단체운영 • 전속단체연수단원운영	국립극장 전속단체운영 • 전속단체 연수단원 운영	국립극장 전속단체 운영 • 전속단체 연수단원 운영
-	국악원전속단체운영 • 전통예술인턴	국악원전속단체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국악원전속단체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국악원전속단체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국악원전속단체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국악원전속단체 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	민속국악원 운영 • 전통예술인턴	민속국악원 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	민속국악원 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민속국악원 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 운영	민속국악원 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국립지방국악원 운영 • 민속국악원 전통예술인턴 단원 운영
-	남도국악원 운영 • 전통예술인턴	남도국악원 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남도국악원 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남도국악원 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 운영	남도국악원 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남도국악원 전통예술인턴 단원운영 • 부산국악원 전통예술인턴 단원운영
-	부산국악원 운영 • 전통예술인턴	부산국악원 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부산국악원 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부산국악원 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부산국악원 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부산국악원 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II.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 41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	-	체육바우처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회서비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회서비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회서비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회서비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회서비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회서비스)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 여성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장애인 체육지원 • 국가대표 훈련지원	장애인 체육지원 • 장애인 체육지원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 장애인 체육지원(국가대표 훈련지원)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지자체, 사회서비스)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지자체, 사회서비스) • 문화관광해설사육성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지자체, 사회서비스) • 문화관광해설사육성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지자체, 사회서비스)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지자체, 사회서비스)
		관광전문인력육성 • 관광전문인력육성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 관광전문인력교육 • 관광아카데미 • 관광안내인력교육 • 관광통역안내사교육 • 카지노조트아카데미 • 관광숙박종사원교육 •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 관광전문인력교육 • 관광아카데미 • 관광안내인력교육 • 관광통역안내사교육 • 카지노조트아카데미 • 관광숙박종사원교육 •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 관광전문인력교육 • 관광안내인력교육 • 관광통역안내사교육 • 카지노조트아카데미 • 관광숙박종사원교육 •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 관광전문인력교육 • 관광안내인력교육 • 관광통역안내사교육 • 카지노조트아카데미 • 관광숙박종사원교육 •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Korea Travel Specialist교육	•Korea Travel Specialist교육	•Korea Travel Specialist교육

42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	-	-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여행산업 경쟁력 강화 및 편의성 제고 •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인적자원 육성관리	인적자원육성관리	인적자원육성관리	인적자원육성관리	인적자원육성관리	인적자원육성관리
-	-	-	-	-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
-	-	-	-	-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	-	-	-	-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 건전여행 풍토 조성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 건전여행 풍토조성

주: 사업명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총괄표 기준임
 자료: 각 회계연도별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대한민국정부, 2009, 2010a, 2010b, 2011a, 2011b, 2012a, 2012b, 2013a, 2013b, 2014a, 2014b, 2015a, 2015b)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총괄표

III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문제점

1. 선행연구에 기반한 문제점	45
2. 운용실태에 기반한 문제점	50
3. 요약	56



본 장에서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기준은 크게 선행연구에 기반한 문제점과 앞서 살펴본 대상사업 운용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구분된다. 선행연구의 경우 대개 단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에 근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기 때문에 매해 꾸준히 분석 결과가 누적되어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반면 운용실태의 경우 실제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선행연구에 기반한 문제점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선행연구 중 대상사업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크게 분석보고서와 연구보고서로 구분될 수 있다. 대표적인 분석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성인지적 예산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발간하는 성인지예·결산 분석보고서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연차보고서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보고서를 중심으로 대상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연구보고서와 분석보고서의 내용이 유사한 점을 고려, 연구보고서의 경우 대상사업에 관한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대상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상의 대상사업과 관련된 지적 내용 및 제안된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에 제시된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대상사업의 적절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대상사업의 적절성 문제는 현재 작성된 사업 중에 성인지적 접근이 불필요하거나 성인지적 접근에 한계가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와 반대로 성인지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대상사업의 부적절성에 대한 주요 근거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 예산이 집행되어 양성평등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경우, 장학사업과 같이

46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요건이 충족될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선발되는 경우, 성별 요인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요인들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의 특성상 성별 분석이 어렵고 양성평등을 고려한 접근에 한계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⁸⁾. 반면 대상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주요 근거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성 특정 예산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경우, 성별 요인을 고려하여 인력운영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경우(예: 여군, 여경 등), 동일한 사업 내용이나 일부 사업은 포함되고 일부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Ⅲ-1〉 선행연구에 기반한 문제점-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대상사업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대상사업 포함 ● 적절한 대상사업 미포함 ● 대상사업 선정의 구체적 근거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 성평등 목표 설정 후 대상사업 선정 ● 국가재정법 상의 명확한 규정 필요
대상사업 선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률적 선정기준에 맞춰 확정·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대상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절차 부재 - 작성부처의 수동적·소극적 행태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중심의 대상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특성에 맞는 대상사업 발굴
대상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이 작음 ● 일부 부처에 사업 수 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 다양화 ● 대상사업의 단계적 확대 계획 수립
대상사업 선정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사업 선정체계의 역할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구 및 조직(위원회 등)을 운영 ● 대상사업 선정 시 각 부처 성인지 업무 책임자 참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0: p.13~14, p.16~24, 2011a: p.11~13, p.25~27, 2011b: p.13~18, 2012a: p.19~21, p.26~27, 2012b: p.30~31, 2013a: p.19~20, 2013b: p.14~18, p.31~32, 2014b: p.133)

8)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부적절 근거에 대하여 ‘현재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사업수혜자의 비율과 연도별 차이를 검토하고 그 차이를 유발하는 환경적·제도적 원인을 파악하여 그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성인지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을 추가 언급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3b: p.17).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성평등 목표를 먼저 설정한 후 그에 맞는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적절한 사업이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과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범위를 모든 예산사업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주제에 따라 일부 예산사업만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0: p.41~42).

두 번째 문제는 대상사업의 선정절차이다. 현재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일률적 선정기준에 맞춰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하향식으로 확정·통보하기 때문에 작성기관은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상사업을 발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4a: p.143). 따라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의 통보 방식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각 부처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협의를 거쳐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작성양식,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한 후 각 작성기관이 이를 기준으로 대상사업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기획재정부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대상사업을 조정하고 확정한다는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3b: p.32).

다음 문제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이다. <표 I-1>에서 보았듯이, 현재 성인지예산이 정부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회계연도 기준 7.2%이다. 이에 대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원칙적으로 성인지예산은 국가재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규모는 정부 총지출의 10%에도 못 미쳐 극히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만 사전적·사후적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며, 선정된 대상사업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일부 부처에 편중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 전반에 걸친 성인지적 접근을 위해서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5: p.36~37).

마지막으로 대상사업 선정체계와 관련된 지적이다. 여성가족부의 협조하에 기획재정부는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부처간의 역할구조 상 대상사업 결정에 있어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사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상사업 선정에 위한 기구 및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2a: p.26~27). 또한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 각 부처의 성인지예산 담당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적절한 대상사업 선정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2a: p.27, 2012b: p.30~31).

다음으로 연구보고서 상의 공무원들의 대상사업과 관련된 의견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 성인지예산 관련 의견조사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시행되어 왔는데, 2013년 이전까지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양식과 지침, 매뉴얼, 컨설팅 등에 대한 작성 공무원들의 의견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2014년 이후에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작성 담당자의 인지 및 행동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조선주 외, 2014a: p.77~78). 따라서 2013년 이전의 의견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대상사업에 관한 공무원의 의견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표 Ⅲ-2〉 선행연구에 기반한 문제점-연구보고서

연도	주요 응답 결과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50% 이상, 부적절: 10% 미만 ● 대상사업 선정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사업이 수혜자의 성별 구분이 가능하고 성별통계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40% 이상이 동의하나 - 성별 수혜편차가 예상되는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13.4%만이 동의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25.9%, 부적절: 45.0%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27.2%, 부적절: 36.6%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29.6%, 부적절: 31.9%

주: 연도는 조사시행 연도 기준이며, 조사대상자가 일반인과 전문가였던 2010년은 제외함
자료: 마경희 외(2009: p.74~75, p.79~80), 이명재 외(2013: p.18)의 자료를 필요한 부분만 발췌, 재가공함

2009년 실시된 의견조사는 대상사업에 관해 크게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과 담당 사업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로 구분되는데,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담당자는 10% 내외였다. 반면 대상사업 선정의 타당성에 있어서는 담당 사업이 성별 수혜의 편차가 예상되는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 13.4%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마경희 외, 2009: p.173).

2011, 2012, 2013년에 시행된 의견조사 결과에서는 대상사업의 적절성에 대해 중립적인 의견을 제외하고 적절 의견에 비해 부적절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⁹⁾. 해마다 부적절 의견이 조금씩 감소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담당 사업의 대상사업 선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9) 대상사업 적절성과 관련하여 2009년의 응답결과(부적절 10%미만)와 2011, 2012, 2013년(부적절 30% 이상)의 응답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은 2011~2013년의 경우 현재 활용되고 있는 지침상의 선정기준에 대한 적절성을 질문한 반면 2009년의 경우 지침상의 선정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선정기준(수혜자 성별 구분가능 사업, 수혜자 성별통계 생산가능 사업, 성별 수혜의 편차 예상사업)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운용실태에 기반한 문제점

본 절에서는 앞서 II장에서 살펴본 대상사업 운용실태에 기반하여 제도 운영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문제점은 성인지예산제도가 일반 예산 제도 안에 통합되어 운영됨에 따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의 장점이 있는 반면 독립적인 대상사업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표 II-11>의 제외사유를 보면 주요 사유가 사업종료, 사업통·폐합, 부처이관, 부처개편 등으로 성인지예산제도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대상사업이 변화하고 있었다.

<표 III-3>을 보면, <표 II-11>의 연도별 제외사유와 해당 연도의 ‘일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내용이 함께 작성되어 있다. ‘일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의 내용은 크게 ‘예산안 편성방향’과 ‘예산안 작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으로 구성된다. <표 III-3>에 제시된 내용은 ‘예산안 편성 지침’ 중 ‘세출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이다. 전체적으로 기본 방향은 모든 재정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비효율적 지출을 감축하라는 내용이며, 2012회계연도, 2013회계연도의 경우 성과평가 부분을 강조한 반면 2014회계연도 이후에는 지출효율화 및 사업 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2015회계연도부터는 유사·중복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부처간·부처내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중 사업통·폐합으로 인한 제외사업이 '12회계연도 1개, '13회계연도 3개, '14회계연도 6개, '15회계연도 17개, '16회계연도 19개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에는 ‘재정지출 효율화 및 보조사업 감축 기조에 따른 사업종료·통폐합으로 대상사업 수가 11개 감소하였다’고 밝힌바 있다(대한민국정부, 2015a: p.4).

〈표 Ⅲ-3〉 연도별 대상사업 제외사유 및 예산안 편성 지침

회계연도	제외	추가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2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종료: 15개 - 부처이관: 5개 - 사업통·폐합: 1개 - 부적절: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필요성 자체 점검 - 신규사업의 재원대책 ... (생략)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종료: 7개 - 부적절: 8개 - 사업통·폐합: 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필요성 자체 점검 - 신규사업의 재원대책 ... (생략)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준: 3개 - 사업종료: 5개 - 부적절: 4개 - 부처이관: 1개 - 사업통·폐합: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필요성 자체 점검 - 신규사업의 재원대책 ... (생략) -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4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통·폐합: 17개 - 사업종료: 7개 - 부적절: 12개 - 부처자체미작성: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필요성 자체 점검 - 신규 사업의 재원대책 마련 ... (생략) 계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위주로 재편, 우선순위 점검하여 구조조정 - 기존 의무지출 사업은 제도개선, 법 개선 추진 유사·중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서비스 제공 사업 통·폐합 - 체감효과가 큰 부문 역량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간 유사·중복 대상 사업 발굴 : 부처내 유사·중복 대상 사업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3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종료: 11개 - 사업통·폐합: 19개 - 부적절: 4개 - 부처이관: 1개 - 부처개편: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필요성 자체 점검 - 재원대책 마련 및 사업수 총량 관리 - 일자리 창출의 양·질을 고려 ... (생략) 계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 점검하여 구조조정 추진 - 의무지출 사업도 제도개선 추진 유사·중복사업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간 및 부처내 모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4가지 기준 제시 - 부처내 유사·중복사업: 4가지 기준 제시

자료: 기획재정부(2011a: p.22~23, 2012a: p.22~23, 2013a: p.27~28, 2014a: p.31~33, 2015a: p.31~33)¹⁰⁾

10) 기획재정부(2014a)의 경우 해당 자료에 페이지가 미기재되어 있어, 연구자가 임의로 파악하여 작성함

성인지예산의 개념 자체가 별도의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 기존 재정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한번 더 분석한다는 것이므로 이처럼 일반 예산 지침의 테두리 안에서 대상사업이 변동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는 시기는 5월 정도인 반면 사업통·폐합 작업이 끝나는 시기는 8월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관리나 예측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대상사업이 외부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대상사업 관리에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현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구조와 연관이 있다. 현재 선정기준 구조는 앞서 보았듯이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전년도 작성사업’,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은 당해 연도 시행사업이 그대로 적용되며 ‘전년도 작성사업’은 이전 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을 의미한다.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은 대상사업 발굴이 가능하도록 그 의미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작성된 대상사업의 대부분은 성별영향분석 평가 추진사업이다. 이 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한 사업들이 그대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구조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사업의 경우 ‘13회계연도 8개(전체 275개 사업, 대한민국정부, 2012a: p.5), ‘14회계연도 4개(전체 339개 사업, 대한민국정부, 2013a: p.5), ‘15 회계연도 6개(전체 343개 사업, 대한민국정부, 2014a: p.5), ‘16회계연도 8개(전체 332개 사업, 대한민국정부, 2015a: p.5)에 불과하다.

즉 부처의 적극적인 대상사업 발굴 노력이나 특정 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부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선정 기준은 대상사업이 수동적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구조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업이 포함되거나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한 사업들이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 문제점은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있어 부처와 담당자의 소극적인 행태이다. <표 II-7>을 보면, 대상사업 수가 2개 이하인 부처의 경우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미작성 사이에서 변동이 잦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려는 부처의 의지에 따라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기준에 따라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해에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그렇지 않은 해에는 성인지예산서를 미작성하는 것이다. 2010회계연도 이후 기존 작성 부처가 아닌 신규 부처가 자발적으로 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경우는 헌법재판소를 제외하고는 없었으며, 그 외 '15회계연도에 여성가족부의 독려로 법제처와 방송통신 위원회가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작성한 바가 있다(조선주 외, 2014b: p.27).

담당자 역시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있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2014회계연도부터는 대상사업 3단계 협의과정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각 부처는 대상사업에 대해 제외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2014회계연도에는 14개 부처 60개 사업이 제외 요청을 하였으며(대한민국정부, 2013a: p.10), 2015회계연도에는 8개 부처 38개 사업(조선주 외, 2014b: p.21), 2016회계연도에는 8개 부처 34개 사업(대한민국정부, 2015a: p.9)이 제외요청을 하여 전문가의 대상사업 검토를 받았다. 또한 검토 결과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라는 의견이 나오더라도,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미작성한 경우도 있었다(<표 II-11> 참조).

이러한 현상은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던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주요사업들이 대상사업에서 누락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¹¹⁾,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 사업종료나 사업통·폐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부처의 성평등 목표 역시 적절하게 수립되기 어렵다. 현재 부처의 성평등 목표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대상사업들의 성평등 목표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설정되는데, 주요사업이 아닌 주변사업 중심으로 대상사업이 선정되는 경우 부처의 성평등 목표 역시 주변 사업 위주로 설정돼 부처의 주요 역할이나 설립 목적을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에 김영숙 외(2011: p.115)에서는 대상사업이 각 부처의

11) 김영옥 외(2010: p.27)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대상 사업이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주요 국정사업 및 예산의 비중이 높은 주요 정책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54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주요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선정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대상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해마다 부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일부 사업들이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고는 있으나, 그 판단이 사업담당자의 제외요청사유, 해당 사업에 대한 국회 및 언론의 지적, 검토를 시행한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 상설 협의체의 협의 등 다양한 요인들에 근거하다보니 명확한 체계성을 갖추고 진행되기 보다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들이 빈번하다. 따라서 유사한 목적이나 내용을 가진 사업이더라도 다른 방향의 검토의견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앞서 살펴본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진행할 심사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은 앞서 지적한 심사기구와 관련된 문제이다. 대상사업 선정체계에서 살펴보았듯이 2014년 6월 ‘성인지예·결산 관계부처 상설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상설협의체는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상징하나, 실제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거나 상설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근거가 부재하여 강제성이 없다보니 대응의 효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용원(2014: p.74~76)은 이에 대해 ‘상설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성인지예·결산 심의회 또는 제도운영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발의 내용은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성인지 예산결산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성인지예산제도 개선 및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해야한다는 것이며,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남인순 외, 2014: p.6~8). 모두 제도 운영을 위한 기구의 신설 및 기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표 Ⅲ-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제8조의3(성인지 예산결산심의위원회) ①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운용 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성인지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인지 예산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결산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5. 제57조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6.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총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p> <p>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차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2.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p>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자료: 남인순 외(2014: p.6~8)

3. 요약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표 III-5>와 같다. 우선 선행연구에서는 부적절한 대상사업이 포함되거나 적절한 사업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선정방식이 개선되어야 함으로 제안하였으며, 선정절차와 관련하여 현재와 같이 기준을 통해 사업이 지정되는 방식의 경우 중요 사업들이 포함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부 부처에 편중되어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구 및 조직 설립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 및 담당 사업의 대상사업 선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절에서 살펴본 대상사업 운용실태에 기반한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되는데, 우선 성인지예산제도가 예산주기 안에서 움직이다보니 일반 예산의 편성방향이나 지침이 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그 결과 대상사업에 대한 정확한 관리나 예측이 어려워지며, 현재의 선정기준 구조 상 대상사업이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형태를 띄게 되어 선행연구에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부적절한 대상사업이 포함되거나 성인지적 접근이 요구되는 중요 사업들이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부처의 적극적인 대상사업 발굴을 유도하거나 특정 사업에 대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다음 문제는 부처와 담당자의 소극적인 행태이다. 자발적인 대상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반면 제외요청 사업의 수는 전체 대상사업 수에 비하여 과도한 편이었다. 또한 검토결과를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성인지예산서를 미작성한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외에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설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운용실태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문제, 대상사업 선정체계의 문제, 공무원의 수용성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대상사업 선정기준 문제는 각 부처의 주요 사업이 대상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부적절한 대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대상사업 선정체계는 앞서 말한 대상사업의 관리를 위해 대상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고 주요 사업을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다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Ⅲ-5〉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문제점 요약

선행연구에 기반한 문제점		운용실태에 기반한 문제점	
① 대상사업 적절성 - 부적절한 사업이 포함되거나 적절한 사업이 미포함됨 ② 대상사업 선정절차 - 적절한 대상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함 - 작성부처의 소극적 행태를 유발함 ③ 대상사업 확대 - 일부 부처에 편중되고 전체 재정사업의 성인지적 접근이 어려움 ④ 대상사업 선정체계 -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구 및 조직 설립이 요구됨 ⑤ 공무원의 낮은 수용성		① 대상사업이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구조 - 일반 예산안의 범주 안에서 움직임 - 외부에서 대상사업이 결정됨 -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한 사업 미포함 ② 부처 및 담당자의 소극적 행태 - 주변사업 및 소액사업 위주의 선정 - 과도한 제외요청이 이루어짐 ③ 대상사업 적절성 판단을 위한 기준 부재 ④ 상설협의체의 운영 근거 부재 - 운영 효력이 낮아짐	
요약	문제점(Ⅲ장)		개선방안(Ⅳ장)
	1. 대상사업 선정기준 - 중요사업 포함 기준 - 부적절한 대상사업 관리		성인지예산 세부지침 개정
	2. 대상사업 선정체계 - 대상사업 적절성 심의 - 중요사업 선정		상설협의체 기능 강화: 훈령 신설
	3. 공무원 수용성 제고		성인지예산 작성지침 개정



IV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개선방안

- | | |
|------------------|----|
| 1. 성인지예산 세부지침 개정 | 61 |
| 2. 상설협의체 훈령 신설 | 68 |
| 3. 성인지예산 작성지침 개정 | 72 |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세 가지의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인지예산 세부지침 개정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인지예산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표 Ⅳ-1〉 성인지예산 세부지침 개정(안)

원안	개정안
<p>1. 적용대상</p> <p><input type="checkbox"/>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p> <p><input type="checkbox"/> '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p> <p><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p> <p>○ 국정과제 등 해당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중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여지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p> <p>– 여성, 가족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 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등</p> <p>○ '16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 사업은 반드시 포함</p>	<p>1. 적용대상</p> <p><input type="checkbox"/>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p> <p><input type="checkbox"/> '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p> <p><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p> <p>○ 국정과제 등 해당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중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여지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p> <p>– 여성, 가족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 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등</p> <p>○ '16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 사업은 반드시 포함</p> <p>○ <u>성인지예·결산 상설협의체 검토 결과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기 통보 후 작성</u></p>
<p>2. 세부지침 ~ (생략)</p> <p><input type="checkbox"/> 행정사항</p> <p>○ 사업담당자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여 작성방법 숙지 후 성인지예산서 작성</p>	<p>2. 세부지침 ~ (생략)</p> <p><input type="checkbox"/> 행정사항</p> <p>○ 사업담당자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여 작성방법 숙지 후 성인지예산서 작성</p> <p>○ <u>외부기관의 지적사항(대상사업 부적절)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조정 가능</u></p>

현재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관련한 주요 문제는 중요사업 포함 문제와 부적절 사업의 제외 문제라 할 수 있다. 성인지예산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 그에 따른 자원배분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양성평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09: p.20). 따라서 그 동안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매년 조금씩 변화해오며, 각 부처의 중요 사업들을 포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표 II-2> 참조). 2014회계연도부터는 국정과제¹²⁾ 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유도해 왔으며, 2015회계연도부터는 대상사업 발굴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침을 통해 전달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부처에서 자발적으로 중요사업을 선정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제도의 수용력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대상사업의 주변화 문제는 비단 성인지예산제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났었는데, 조선주 외(2012: p.32, 재인용)¹³⁾에 따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경우 2010년까지 과제선정위원회 등의 자문을 통해 대상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작성하도록 운영하였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업무협조가 용이하거나 주변사업 중심으로 대상사업이 선정되는 문제가 나타나 2011년에는 지정과제 방식을 함께 병행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참조하여 성인지예산 세부지침 상의 선정기준에 ‘상설 협의체에서 지정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단, 중요사업 선정에는 명확한 선정기준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성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지수, 국가재정 운용계획¹⁴⁾과의 연계, 국정과제 중심의 국가의 주요 사업, 다부처 다부문 사업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12) 국정과제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 관리하는 국가 비전과 전략 목표 설정 및 추진과 관련된 의제들이 체계화된 것이다. 따라서 국정과제는 가장 높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예산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윤영진 외, 2008: p.115).

13) 재인용 문헌은 김근세 외(2010: p.57, p.61)와 김정희 외(2011: p.87)임

14)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세입, 세출, 재정수지, 조세부담률, 국가채무 등의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틀이 되며 매년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와 연동·보완하는 특징이 있으나(국회예산정책처, 2016: p.71), 성인지예산은 전체 국가재정운용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부사업 단위에서 각각 운용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예산 운용과 성인지예산의 연계성이 낮은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용원, 2013: p.55).

〈표 Ⅳ-2〉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정과제 예시(2011년)

1. 지정과제
 - ☐ 개념
 - 여성가족부가 연도별 의제를 선정하여 의제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을 각 기관에 지정·통보
 - ☐ 의의
 - 성별격차가 큰 분야의 관련 정책을 지정·분석하여 정책개선을 실행함으로써 성평등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 ☐ 2011년 지정과제 분야
 - 1) 일자리 분야
 -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포인트이지만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OECD 주요국가 가운데 매우 낮은 수준임
 - 특히 '09년 경제위기로 여성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고용여건이 취약함
 - 2010년 여성가족부 성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 소득분야는 8개 성평등부문 가운데 2위이지만 지속적으로 성별격차가 커지는 부문으로 나타나 우선적이며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임
 - 2) 안전분야
 -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포함한 폭력 및 강력범죄 등에 여성과 아동이 특히 취약한 상황임. 또한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에서도 여성이 취약한 상황임
 - 2010년 여성가족부 성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분야는 8개 성평등 부문 가운데 7위로 우선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임
2. 자율과제
 - ☐ 개념
 - 각 기관에서 소관 정책이나 사업 중 자율적으로 선정
 - ☐ 대상사업 선정기준
 -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 : 경제 성장을 위한 국민과 밀접한 정책
 - :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복지, 고용, 교육 부분 정책
 - 관련 통계상 정책 수해도의 성별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정책 또는 향후 성별격차의 발생 우려가 있는 정책
 - : 정책(사업)의 대상집단을 성별로 구분 가능한 정책
 - : 정책(사업) 수해정도에서 성별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 수해대상 범위가 넓으며, 파급효과가 큰 중요정책
 - : 기관장 공약사업 등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된 주요정책과제
 - :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과제
 - :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성격차지수(GGI) 등 양성평등 관련 국제지표에 영향을 주는 정책

자료: 여성가족부(2010: p.9~11)

중요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유사 사례를 참조해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중요규제 심사 기준이 있을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2016.07.12.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¹⁵⁾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비중요규제와

64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중요규제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판단기준은 <표 IV-3>과 같다.

<표 IV-3> 중요규제 판단기준

중요 규제
- 분과위원회 또는 본 위원회 심의·의결
1.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2.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3. 명백하게 진입 또는 경쟁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조치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6.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7. 중소기업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기술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자료: 규제정보포털(2016.07.12. 검색)¹⁵⁾

현재 성인지예산서는 각 부처별, 사업별로 작성되고 있어 조금 더 큰 틀에서 중요사업을 선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상설 협의체에서 위와 같은 중요사업 선정 기준을 마련한 후, 사업을 선정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으로 세부지침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자문을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만으로는 중요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기존의 3가지 기준 외에 대상사업 신규 발굴 및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전문가1).

성인지예산제도가 성 주류화를 지향하여 여성예산과 일반 예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의 선정기준은 여성예산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성인지예산제도의 쟁점 역시 여성정책의 영역에 한정되어 발생하고요. 남성과 여성을 넘어서,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을 식별하여 성인지예산제도의 틀 속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의 개별부처에서 재량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상향식 방식에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재정사업이 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방식에 기획재정부 혹은 여성가족부에서 하향식으로 대상사업을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전문가3).

15)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1028&efYd=20150518#AJAX>

16) <https://www.better.go.kr/fz/intro/RrcOrgn02.jsp>

대상사업과 관련한 다음 문제는 부적절한 대상사업의 관리 문제이다. 2014회계연도부터 대상사업 협의 및 조정을 위해 3단계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중이지만(그 과정에 부처의 제외요청 절차가 포함되어 운영 중임), 동 절차가 법적 근거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에 명시된 것이 아닌 형식적인 것이어서 그 효과는 제한적인 편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3b: p.32). 실제로 대상사업 검토 결과에 대한 부처의 수용력은 낮은 편이며, 검토 결과를 강제할 수단 역시 부재한 상태이다. 또한 제외요청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처에 따라 혹은 사업담당자에 따라 과도한 제외요청이 이루어 지기도 한다. 이에 관한 자문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3년 이상 지속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 하여 제외해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어요(전문가2).

제외사업 기준이 제시된다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2년 연속 국회, 외부기관, 언론 등에서 동 사업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적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발송한 경우에 한해서만 상설협의체에서 논의하여 제외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공무원2).

제외사업 기준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재의 선정기준들이 그 의미가 모호하므로 현재의 기준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공무원3).

제외기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모두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제도 운용 실태를 볼 때 현재와 같이 대상사업에 관한 수용력이 낮은 상태에서 제외기준을 만들어 제시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제외기준을 마련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기준으로 제외해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성과목표와 목표치가 설정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작성 내용을 볼 때 이런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된다.

타 제도를 참조해 보면, <표 IV-4>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제시되어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적정 투자 시기, 자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추진여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부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한 제도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6: p.89). 운용지침을 보면, 대상사업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면제사업의 기준 역시 제시하고 있다. 면제하고자 하는 사업의 경우, 면제절차 역시 요구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면제 여부는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면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상의 불이익 조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성인지예산 제외 절차와 비교할 때 비교적 그 절차가 까다롭고 조사결과 수용에 관한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대한민국정부, 2015c: p.1,161, <표 II-1>의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 참조). 면제사업의 제출 현황을 보면, '15년의 경우 41개 사업(예산 32개 사업: 대한민국정부, 2014c: p.1,157, 기금 9개 사업: 대한민국정부, 2014d: p.1,045), '16년의 경우 14개 사업(예산 10개 사업: 대한민국정부, 2015c: p.1,161, 기금 4개 사업: 대한민국정부, 2015d: p.1,041)이었다. 성인지예산의 제외요청 사업 수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IV-4〉 예비타당성조사 예시

항목	지침 내용
제4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p>① 예비타당성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2.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p>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은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말하며,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세부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라 정보화 예산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말한다.</p> <p>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재정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분야·부문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 중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p>

항목	지침 내용
제11조 (면제사업)	<p>①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p>~ (생략)</p>
제12조 (예타면제 절차)	<p>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과 관계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별도로 협의한다.</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여부를 결정한다.</p> <p>③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항 제10호 전단에 해당하는 사업의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및 자금운용계획 수립시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p>
제15조 (대상사업의 선정원칙)	<p>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p>

자료: 기획재정부(2016c, p.1~7 중 해당 내용 발췌)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성인지예산의 제외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시기적 으로 이른 감이 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의 제외요청 절차는 보다 공식화되어 운영될 필요는 있지만 제외요청 절차는 현재보다 까다롭게 변경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외부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제외요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세부지침에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2. 상설협의체 훈령 신설

대상사업 선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설협의체 훈령’ 신설을 제안한다.

〈표 IV-5〉 성인지예·결산 상설협의체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26조 및 제57조에 따라 운영되는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성인지예·결산 상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성인지예·결산 작성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2. 성인지예·결산 대상사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인지예·결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의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및 재정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2. 성인지예·결산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 ③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예산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이, 결산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의장직을 수행한다.
-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 의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운영) ① 의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체는 연 3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인지예·결산 제도와 관련된 공무원 및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성인지예·결산 관련부처 상설협의체’는 현재 관련부처들과 협의하여 성인지 예산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대상사업을 심의하며 성인지예산서가 기한 안에 잘 제출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그 기능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없어 그 효력이 낮아진다는 것이 문제이다. 상설협의체의 협의 내용이 좀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 심의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상설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상설협의체의 규정 신설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획재정부 내의 다른 위원회들처럼 관련 훈령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위원회들은 훈령을 만들어 훈령에 맞춰 운영하고 있거든요(공무원1).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상설협의체의 논의 결과가 부처에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훈령 제정도 필요하지만, 다른 부처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훈령 이상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4).

훈령을 제정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성인지예산제도는 추진체계가 완결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설협의체가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요. 이 때 상설 협의체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기능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상사업 선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국회 및 의회 심의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부처와 특정 예산 영역(여성/복지)에 머물고 있는 대상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성인지예산 제도에 관한 잘못된 언론보도나 분석보고서 등에 대한 의견 제시, 심의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의견 제시 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전문가2).

상설협의체는 제도 운영의 현황과 쟁점을 정례적으로 의논하고 공유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제도의 법적 기반보다는 실제 운영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설협의체 논의 의제를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하고,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전략 주제를 설정하여 문제 해결형의 운영방식을 지향하면 좋겠습니다. 형식보다는 참여 주체들의 관심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전문가3).

훈령 제정은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 훈령으로 제정될 경우, 모든 기관에 대상사업 선정 및 심의에 있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운영방식이나 구성에 있어서는, 정기회의를 제외한 수시회의가 좀 더 개최되어야 할 것 같고, 대상사업이 많은 관계부처들도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공무원2).

상설협의체 훈령 등의 제도화된 양식은 제도 운영에 있어 필수입니다.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상설협의체의 위상을 강화하고 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3).

70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상설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훈령(안)을 신설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기획재정부 내의 훈령을 확인해 보았다. 그 중 상설 협의체와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훈령들의 규정 목적과 규정 조항을 살펴보니 <표 IV-6>과 같았다. 제시된 위원회 및 심의회, 협의회의 주요 설립 목적은 관련 정책 운용에 관한 자문과 필요 사항에 대한 심의·협의·조정이었으며,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당 훈령을 신설하였음을 규정 목적에 명시하고 있다.

<표 IV-6> 기획재정부 시행 훈령 예시

구분	훈령 내용
재정정책 자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훈령 제30호, 2008.7.31. 시행 • 규정 목적: 기획재정부의 예산, 세제, 국고 등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 규정 조항: 목적, 구성, 위원장 등 자문위원, 기능, 회의, 간사 업무 등, 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의 수당, 운영세칙
경제정책 자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훈령 제94호, 2012.1.6. 시행 • 규정 목적: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경제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 규정 조항: 목적, 기능, 구성, 임기,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의 임무, 회의, 사무국의 설치, 자료제출 등 협조, 수당 등
예산집행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훈령 제172호, 2014.2.26. 시행 • 규정 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규정 조항: 목적, 구성, 위원회 기능 및 운영, 위원의 수당, 운영세칙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훈령 제177호, 2014.4.14. 시행 • 규정 목적: 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세칙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2343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설치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규정 조항: 목적, 자발적 노력, 특별한 노력,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간사, 위촉위원에 대한 대우, 회의에서의 발언,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성과금의 지급신청,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 성과금의 지급규모, 기여도에 따른 차등지급, 성과금의 가산지급, 성과금의 지급기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훈령 제188호, 2014.11.27. 시행 • 규정 목적: 주요 조세특례 제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둔다. • 규정 조항: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의견의 청취, 수당 등, 운영세칙

구분	훈령 내용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훈령 제225호, 2015.1.23. 시행 • 규정 목적: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로서 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 규정 조항: 목적,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의견의 청취, 수당, 협조 및 지원, 기타
정책성과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훈령 제235호, 2015.7.7. 시행 • 규정 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규정 조항: 목적, 정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등, 분과위원회, 회의, 회의참석 등 요구, 자체평가의 실시 등, 수당 등의 지급, 비밀 보호, 운영세칙
회계책임관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훈령 제236호, 2015.8.11. 시행 • 규정 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국가 회계제도 개선 및 국가결산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회계책임관협의회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규정 조항: 목적, 기능, 구성, 위원장, 회의, 안건 제출 및 배부, 간사, 실무협의회,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운영세칙

자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2016.07.11. 검색)¹⁷⁾

상설협의체의 구성 목적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식, 참여위원, 논의 내용,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상설협의체 역시 <표 IV-6>의 기타 위원회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의 훈령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IV-6>의 훈령 내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규정 조항을 보면 목적, 기능, 운영, 회의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상설협의체 훈령(안)을 제시하면 <표 IV-5>와 같으며, <표 IV-5>의 제6조에 제시한 바처럼 추후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될 수 있다¹⁸⁾.

17) <http://www.mosf.go.kr/lw/admrul.do>

18) 현재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이용원, 2013: p.57)이 논의되고 있는 바, 추후 상설협의체의 기능으로 ‘평가’ 기능이 추가될 경우 ‘제7조(평가의 실시) 협의체는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라 해당연도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등의 조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성인지예산 작성지침 개정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의 수용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 IV-7>과 같이 성인지예산 작성지침의 개정을 제안한다.

<표 IV-7> 성인지예산 작성지침 개정(안)

원안	개정안
<p>[작성 대상 사업]</p> <p><input type="checkbox"/> 성인지 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16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 기타 성별영향 분석이 가능한 사업 ○ '16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 사업은 반드시 포함 <p>[세부 지침]</p> <p><input type="checkbox"/> 성인지 예산 작성부처는 ~</p> <p>~ (생략)</p>	<p>[기본원칙]</p> <p><input type="checkbox"/> 재정사업이 성평등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연계 강화</p> <p><input type="checkbox"/> 작성결과를 사업 운영 등에 적극 활용</p> <p>[예산연계 기준]</p> <p><input type="checkbox"/>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한 경우, 작성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p> <p>[작성 대상 사업]</p> <p><input type="checkbox"/> 성인지 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16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 기타 성별영향 분석이 가능한 사업 ○ '16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 사업은 반드시 포함 <p>[세부 지침]</p> <p><input type="checkbox"/> 성인지 예산 작성부처는 ~</p> <p>~ (생략)</p>

마경희 외(2009: p.75~76)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들과의 초점집단 토론을 통해, 작성 공무원들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부담감은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절성이나 성별분리통계 구축 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사업의 성 불평등 문제가 가시화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계획수립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사업담당자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상사업 선정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표 IV-8>의 실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사업담당자들의 직급을 보면, 6급 이하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제도 개선이나 예산배분의 기준을 변경하자고 제안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있다고 전제할 때, 담당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동시에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은 성인지예산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가 예산 배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주는 것이다.

〈표 IV-8〉 공무원 의견조사 응답자의 특성

연도	응답자 특성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122명 • 4~5급: 43명(35.2%) • 6~9급: 79명(68.7%)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371명 • 5급 이상: 127명(34.2%) • 6급 이하: 239명(64.4%) • 기타/무응답: 5명(1.3%)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393명 • 5급 이상: 95명(24.2%) • 6급 이하: 298명(75.8%)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381명 • 5급 이상: 88명(23.1%) • 6급 이하: 284명(74.5%) • 기타(산하기관): 9명(2.4%)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513명 • 5급 이상: 177명(34.5%) • 6급 이하: 336명(65.5%)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453명 • 5급 이상: 154명(34.0%) • 6급 이하: 299명(66.0%)

주: 연도는 조사시행 연도 기준이며, 조사대상자가 일반인과 전문가였던 2010년은 제외함
 자료: 마경희 외(2009: p.20), 이명재 외(2013: p.17), 조선주 외(2014a: p.85), 조선주 외(2015: p.115~116)의 자료를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재가공함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표 IV-9>)을 보면 사업유형별로 작성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사업유형은 다르지만 작성지침의 작성 내용 구성은 유사한데, 대부분이 [기본원칙]과 [예산연계 기준]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과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기본원칙]을 통해 성과평가와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예산연계 기준]을 통하여 평가 내용과 예산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일자리 사업 역시 [기본원칙]을 통해 재정사업이 일자리 창출 등 고용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예산연계 기준]을 통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경우, [기본원칙]이나 [예산연계 기준]은 제시되지 않은 채 [작성 대상사업]과 [세부지침]만 명시되어 있다.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정부의 주요 재정제도로 성별 요인을 고려하여 재원의 배분방식을 바꾸는데 목적이 있지만, 그에 관한 내용은 지침상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예산서의 작성 및 작성결과가 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기본원칙]과 [예산연계 기준]을 지침 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표 IV-9〉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내용

사업유형	지침 내용
성과평가 대상사업	<p>[기본원칙]</p> <p><input type="checkbox"/> 세출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연계 강화</p> <p><input type="checkbox"/>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중복사업 등으로 평가받은 사업의 경우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여 예산 편성</p> <p><input type="checkbox"/>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p> <p>[예산연계 기준]</p> <p>- 통합 재정사업평가</p> <p><input type="checkbox"/> 평가 등급에 따라 예산 요구 및 편성</p> <p><input type="checkbox"/> 평가결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에서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가 이행상황을 점검</p> <p>- 심층 평가</p> <p><input type="checkbox"/>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p> <p><input type="checkbox"/> 심층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반영하여 예산 요구</p> <p>... (생략)</p>

Ⅳ.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개선방안 ••• 75

사업유형	지침 내용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p>[기본원칙]</p> <p><input type="checkbox"/>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관련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요구에 앞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p> <p><input type="checkbox"/>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 예산 반영 가능</p> <p>[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요건]</p> <p>[세부지침]</p> <p>... (생략)</p>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p>[기본원칙]</p> <p><input type="checkbox"/>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차별 소요예산을 요구</p> <p><input type="checkbox"/>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선 총사업비 변경, 후 예산반영' 절차 준수</p> <p>[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p> <p>[세부지침]</p> <p>... (생략)</p>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p>[작성 대상사업]</p> <p>[세부지침]</p>
고용영향 평가 대상사업 및 일자리 사업	<p>[기본원칙]</p> <p><input type="checkbox"/> 재정사업이 일자리 창출 등 고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연계 강화</p> <p><input type="checkbox"/>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p> <p><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 신설·변경시 고용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p> <p>[예산연계 기준]</p> <p>- 고용영향평가</p> <p><input type="checkbox"/>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고용영향평가(고용부)를 실시한 경우, 평가 결과를 반영 하여 예산을 요구</p> <p>- 고용영향자체평가</p> <p><input type="checkbox"/> 재정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부처가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결과 및 자체 제도개선(안)을 예산 요구자료에 포함</p> <p>... (생략)</p>

자료: 기획재정부(2016a: p.37~45, p.48~49)



V

결론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젠더 관점’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식하되 이를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맥락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를 가져오는 체계와 구조 자체가 변화해야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마경희, 2014: p.459). 실제 예산과정의 참여 주체인 공무원들은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유발하는 불평등 구조를 발견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담당 사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아래 <표 V-1>을 보면, 성인지예·결산서의 작성 항목이 ‘젠더 관점’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알 수 있다.

<표 V-1>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항목 및 젠더 관점

젠더관점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 인식’	<input type="checkbox"/> 성별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성별분리통계 - 사업수혜자 성별분리통계 - 예산현황 성별분리통계	-
‘차이의 원인 분석’ - 불평등한 권력 관계 및 구조	-	<input type="checkbox"/> 자체평가 - 성평등 현황 및 추진실적 - 결과에 대한 원인
‘개선방안 마련’	<input type="checkbox"/> 성평등 목표 <input type="checkbox"/> 성평등 기대효과 <input type="checkbox"/> 성과목표 - 목표치 - 산출근거	<input type="checkbox"/> 자체평가 - 향후 개선사항

자료: 기획재정부 외(2016a, p.50~51), 기획재정부 외(2016b, p.76~78)의 내용을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재구성함

그러나 이러한 개념의 모호성과 난해함으로 인해, 또한 기본적으로 국가 정책 내에서 젠더이슈의 주변화된 위상과 지위로 인하여 행위주체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김영옥 외, 2007: p.225). 그 결과 실제 국회에 제출된 성인지예·결산서의 작성 내용을 보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의 분석 단계와 예산의 변화 단계로 구분된다. 즉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예산의 변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예산의 변화 정도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결정된다. 그런데 예산 분석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인지예·결산서의 작성 내용이 미흡하다는 것은 예산의 변화로 가는 길이 단절되는 것과 다름없다. 예산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할 것이다.

예산의 결정은 현 연도의 상황을 고려하여 차기연도에 집행할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예산과정이 진행되면 제한된 시간범위 속에서 강도 높은 정치적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결정은 단기적이고 당시 상황에서 핵심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윤영진 외 (2008: p.114). 따라서 성인지적 분석 내용이 예산 결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략적인 접근의 출발점을 ‘적절한 대상사업의 선정’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선정체계로는 적절한 대상사업을 선정 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이 운용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제출된 성인지예산서를 토대로 대상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세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성인지예산 세부지침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대상사업 선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설협의체 훈령(안) 신설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제도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수용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인지예산 작성지침을 개정하여 예산과의 연계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표 V-2〉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준	문제점	개선방안
대상사업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적인 대상사업 선정이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사업 포함 : 부적절사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 세부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사업 포함 기준 제시 : 제외사업 요청 절차 규정
대상사업 선정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사업 적절성 심의 : 중요사업 선정 : 기구 운영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협의체 훈령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협의체 기능 강화 : 설립 및 운영 규정 마련
공무원 수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및 담당자의 소극적 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의 부담 감소 : 적극적 행태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예산 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원칙 및 예산연계기준 제시 : 성인지예산 작성과 예산 연계강화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세 가지 방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로 이행이 가능한 방안들이다. 그 동안 많은 방안들이 제안되어 왔지만, 본 연구에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 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예산의 배분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지와 책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그들의 의지와 책무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국회예산정책처(2009),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2010),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2011a),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2011b),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2012a), 201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2012b),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2013a), 201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2013b),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2014a), 201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2014b),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2015),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2016), 대한민국 재정 2016.
- 기획재정부(2009), 2010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 기획재정부(2010), 2011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 기획재정부(2011a),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 기획재정부(2011b), 2012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 기획재정부(2012a),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 기획재정부(2012b), 2013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 기획재정부(2013a),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 기획재정부(2013b), 2014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 기획재정부(2014a),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 기획재정부(2014b),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기획재정부(2015a),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 기획재정부(2015b),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기획재정부(2016a),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84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기획재정부(2016b),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기획재정부(2016c), 201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기획재정부 외(2016a),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 기획재정부 외(2016b),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 김정희 외(2011),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선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김근세 외(2010),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김영숙 외(2011), 성인지 예·결산서 종합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김영옥 외(2007), 성인지 예산 분석기법 개발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옥 외(2009),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여성부 연구보고서.
- 김영옥 외(2010),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IV): 성인지 예산제도 모니터링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영옥 외(2012),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수립연구, 여성가족부.
- 김효주 외(2015),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종합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남인순 외(20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8.12. 발의.
- 대한민국정부(2009),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 대한민국정부(2010a),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 대한민국정부(2010b), 2011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 대한민국정부(2011a),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 대한민국정부(2011b),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 대한민국정부(2012a),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 대한민국정부(2012b), 2013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 대한민국정부(2013a),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 대한민국정부(2013b), 2014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 대한민국정부(2014a),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 대한민국정부(2014b), 2015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 대한민국정부(2014c), 201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 대한민국정부(2014d),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 대한민국정부(2015a),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 대한민국정부(2015b), 2016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 대한민국정부(2015c), 201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 대한민국정부(2015d),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 마경희 외(2009),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공무원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마경희(2014), “여성주의, 국가, 성평등”, 『젠더와 사회』, (사)한국여성연구소, 동녘.
- 여성가족부(2010), 201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 여성가족부(2015),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윤영진 외(2008),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체계와 실행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명재 외(2013),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 패널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용원(2013), 2014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용원(2014), 201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조선주 외(2010),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종합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조선주 외(2012), 성인지 예·결산서 대상사업 선정 및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선주 외(2013),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조선주 외(2014a),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IV),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선주 외(2014b),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종합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조선주 외(2015),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I):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재정사업의 효율 제고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차인순(2015), “양성평등을 이루는 특별한 방법”, 『젠더리뷰』, 2015 봄호.
- 최진호(2015), 2016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a), 내부자료(연도별 성인지예산 현황)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b), 내부자료(연도별 대상사업 변동현황)



2) 인터넷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검색, 2016.07.07. 검색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1028&efYd=20150518#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제기본법 검색, 2016.07.12. 검색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1028&efYd=20150518#AJAX>

규제정보포털, 중요규제 검색, 2016.07.12. 검색

<https://www.better.go.kr/fz/intro/RrcOrgn02.jsp>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훈령 검색, 2016.07.11. 검색

<http://www.mosf.go.kr/lw/admrul.do>



부 록

[부록 1] 2016회계연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리스트



[부록 1] 2016회계연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리스트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1	국회	입법활동지원	의정활동지원 인턴
2	대법원	국선번호료지원	
3	대법원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4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보수등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여성 정치참여 확대
6	기획재정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7	교육부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교과용도서 심의회 운영
8	교육부	장애학생교육지원	
9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10	교육부	대학평가 및 운영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사업
11	교육부	인문사회 기초연구(R&D)	학문후속세대지원
12	교육부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13	교육부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14-1	교육부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	ASEM-DUO장학사업
14-2	교육부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	한미교육위원단지원
15	미래창조과학부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지원	
16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R&D)	
17	미래창조과학부	이공계전문기술·연구인력양성(R&D)	
18	미래창조과학부	개인연구지원(R&D)	중견연구자지원
19	미래창조과학부	국제 연구인력 교류(R&D)	
20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R&D)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운영
21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관전문인력양성(손익계정)	
22-1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R&D,정보화)	대학CT연구센터육성지원
22-2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R&D,정보화)	학점연계프로젝트
23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우수 두뇌 양성프로그램 운영
24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글로벌마케팅 강화
25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설치운영	

90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26	외교부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27	외교부	필리핀(ODA)	일로일로주 지역보건 역량강화사업
28-1	외교부	네팔(ODA)	농촌공동체개발사업
28-2	외교부	네팔(ODA)	무구지역 모자보건환경개선사업
29	외교부	파키스탄(ODA)	파키스탄 건조농업대학 농축산 기술역량 강화센터 건립사업
30	외교부	동티모르(ODA)	동티모르 아이나로주 모성보건서비스 개선사업
31	외교부	아프가니스탄(ODA)	아프가니스탄 이브니시나 병원 병동 신축 및 ICU 설치사업
32	외교부	에티오피아(ODA)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역량강화사업
33	외교부	아프리카지역 비중점 국가그룹(ODA)	세네갈 중부지역 식수위생 개선사업
34	외교부	중남미지역 비중점 국가그룹(ODA)	아이티 까라콜 의류기술훈련원 건립사업
35	외교부	팔레스타인(ODA)	팔레스타인 제닌 청소년센터 건립사업
36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37	외교부	글로벌연수(ODA)	
38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출연	재외동포 차세대 대회
39	외교부	한국전문가육성	한국이해프로그램
40-1	외교부	글로벌 인사교류	차세대 지도자교류
40-2	외교부	글로벌 인사교류	청년교류
4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4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43-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취업장려금 지급
43-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립대 공납금 지급
4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기초직업 적응훈련)
45	통일부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46	법무부	법무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47	법무부	성범죄 등 4대악 사범 단속	성폭력사범 단속지원
48	법무부	교정교화	
49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50	법무부	치료감호자수용관리	
51	법무부	보호관찰활동	
52	법무부	특정범죄관리	
53	법무부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법교육 연수 및 체험프로그램
54	법무부	직업훈련	
55	법무부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56	법무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	
57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58	국방부	전직지원교육	장기복무전역예정간부 전직컨설팅
59	국방부	민간위탁교육	생산적군복무여건보장 및 인적자원개발
60	국방부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유격장 여군편의시설 설치
61	국방부	일반지원시설	여성편의시설 설치
62-1	국방부	정책활동지원	여성고충상담관 활동비
62-2	국방부	정책활동지원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62-3	국방부	정책활동지원	성인지력 향상 대외위탁 교육
63	국방부	취업활동지원	
64-1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자원봉사활성화지원
64-2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자원봉사활성화지원(경상)
65	행정자치부	지역생활환경개선	아름다운화장실조성
66	행정자치부	연수원수입대체경비	자치단체 여성리더양성심화과정 운영
67	행정자치부	북한이탈주민지원	
68	행정자치부	정보화마을조성및활성화(경상)(정보화)	
69	행정자치부	청사시설관리등위탁	정부청사 어린이집 운영
70	행정자치부	세종청사유지관리	세종청사어린이집운영
71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일자리	
7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72-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3D 전문인력 양성
73	문화체육관광부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양성(R&D)	
74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75-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92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75-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무지개다리 사업
75-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남북문화 상호이해 제고
7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개발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77	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7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공예디자인전문인력양성
7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8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8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전속단체운영	전속단체 연수단원 운영
82	문화체육관광부	국악원전속단체운영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83-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지방국악원 운영	민속국악원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83-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지방국악원 운영	남도국악원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83-3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지방국악원 운영	부산국악원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84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85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회서비스)	
86	문화체육관광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87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장애인 체육지원(국가대표 훈련지원)
8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력 육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8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자체, 사회서비스)	
90-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관광전문인력 교육
90-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관광안내인력교육
90-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관광통역안내사교육
90-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
90-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Korea Travel Specialist교육
90-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관광숙박종사원 교육
91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건전여행 풍토조성
92	문화체육관광부	여행산업 경쟁력 강화 및 편의성 제고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93	문화체육관광부	인적자원육성관리	
94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책임운영)	
9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연구보조원인력채용
96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97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임대	
98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등록	
99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안전성조사	
100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소비정보 교류사업	건전한 식생활 확산
101-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101-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후계농업경영인육성
102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103-1	농림축산식품부	취약농가인력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103-2	농림축산식품부	취약농가인력지원	가사도우미지원
104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10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사무장활동비지원
106-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정비(제주)	농업경영컨설팅지원
106-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정비(제주)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107	농림축산식품부	전통발효식품육성	전통발효식품육성(민간)
108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10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창조혁신형디자인고급인력양성
110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	신진석박사연구인력채용지원
11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112-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에특)(R&D)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112-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에특)(R&D)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113-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전력기금)(R&D)	미래기초인력역량개발
113-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전력기금)(R&D)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11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현장여성R&D인력참여확산기반구축(R&D)	
115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경상보조	의료급여경상보조/의료급여관리사
116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자활근로
117	보건복지부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118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119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120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121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94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122-1	보건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
122-2	보건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
123-1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
123-2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124-1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 일자리지원
124-2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125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지원
126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127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28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료 지원	
120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30	보건복지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131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132	보건복지부	공공형어린이집	
133-1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서비스지원/시간연장형교사
133-2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서비스지원/대체교사
133-3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서비스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134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3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지급	
136	보건복지부	노인단체 지원	노인자원봉사활성화
137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138-1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138-2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
139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확충	
140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관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리운영사업
14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협의회운영	사회복지종사자 직무능력향상교육
14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143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144	보건복지부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
145	보건복지부	2016년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146	보건복지부	감염병예방관리	감염병관리지원(감염병전문가교육)
147	보건복지부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	여성건강융복합기술개발연구
148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생활)	
149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제주)	
150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세종)	
151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인공임신중절예방사업
152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153	보건복지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지원	
154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망 구축	독거노인 응급안전망 구축
155-1	환경부	환경지킴이	자연환경해설사
155-2	환경부	환경지킴이	국립공원지킴이
155-3	환경부	환경지킴이	5대강 환경지킴이
156	환경부	환경친화적경제기반구축	지식기반환경서비스전문인력양성
157-1	환경부	환경산업육성 지원인력 인프라 구축	물산업 프로젝트매니저 양성
157-2	환경부	환경산업육성 지원인력 인프라 구축	생태독성 및 생태위해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
158	환경부	환경무역대응대책추진	국제환경규제정책 전문인력 양성
159	환경부	교육훈련경비	국제환경교육
160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운영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161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	
162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163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지원	사회적기업가육성
164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65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166	고용노동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67	고용노동부	실업자능력개발지원	
168	고용노동부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169	고용노동부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적극적고용개선조치지원
170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생활)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171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지특)	
172	고용노동부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173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지원금	
174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지원사업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175	고용노동부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176	고용노동부	취약계층취업지원	
177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78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179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인력지원	
180	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수당	
181	고용노동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182	고용노동부	전직실업자등능력 개발지원	
183	고용노동부	근로자능력개발지원	
184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185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186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운영지원	
187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기술 · 기능인력양성
188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및훈련매체개발 (한기대)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양성
189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응자)	
190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191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192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	
193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	
194	고용노동부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장년고용연장지원금
195	고용노동부	장년고용지원금	
196	고용노동부	장애인취업지원	
197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원운영	직업능력개발지원
198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199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	근로자건강센터
200	고용노동부	근로자복지지원	기업복지활성화지원
201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	여성가족부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203-1	여성가족부	양성평등문화 확산	양성평등 주간
203-2	여성가족부	양성평등문화 확산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204	여성가족부	여성사전시관	
205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206	여성가족부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207	여성가족부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208	여성가족부	국제개발협력(ODA)	
209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정책의식 확산	
210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11	여성가족부	미래 여성인재 양성	
212	여성가족부	가족사업관리 및 연구	가족가치 확산 사업
213	여성가족부	가족문화조성사업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214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	
215-1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215-2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앙사업 관리
216-1	여성가족부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아동여성안전교육 문화사업
216-2	여성가족부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활성화
217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218	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안전지원	
219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220	여성가족부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22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지원	
222-1	여성가족부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222-2	여성가족부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위기청소년 예방 전문가 양성
222-3	여성가족부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223	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확충(생활)	
224	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확충(제주)	
225-1	여성가족부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

98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225-2	여성가족부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	청소년 성문화센터 지원
226	여성가족부	청소년 참여지원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227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228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229-1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229-2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30	여성가족부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231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232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33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34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235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	
236	여성가족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237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238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239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240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241	국토교통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242-1	국토교통부	철도핵심인력양성	철도특성화 대학원
242-2	국토교통부	철도핵심인력양성	국제철도 전문가
242-3	국토교통부	철도핵심인력양성	철도특성화 대학
243	국토교통부	항공전문인력양성	
244	국토교통부	물류산업지원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245	국토교통부	해외인프라시장개척	글로벌청년리더양성
246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알리기및국제협력	수자원전문대학원지원
247	국토교통부	U-City 기반구축	U-City 인력양성
248	국토교통부	국토공간정보 인력양성	
249	국토교통부	다가구매입임대출자	
250	국토교통부	전세임대경상보조	
251	국토교통부	국민임대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252	해양수산부	수산시험연구(R&D)	연구보조원 채용
25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254	해양수산부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255	해양수산부	해양정책및문화육성	해양체험프로그램
25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물기술지역특성화(R&D)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257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육성	
258	해양수산부	어촌6차산업화지원	어촌관광 활성화
259	해양수산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어촌개발리더 및 여성어업인 육성
260	해양수산부	어업경영체등록	등록조사원 채용
261	해양수산부	어업인교육훈련(제주)	
262	국민안전처	해양경찰복지역량강화	복지역량강화/보육시설관리
263	법제처	법령정보제공	어린이법제관
264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265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운영및활성화	
266-1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266-2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267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지원	
268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269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심사지원 등(수입대체경비)	
27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 기준설정 및 인허가 심사 지원 (수입대체경비)	
271-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성차별예방 사이버과정 운영
27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스포츠분야 인권개선
272	국가인권위원회	취약분야 인권개선	여성인권 증진
273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환경조성(민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27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소비자교육 사업
275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조사활동	조사관교육훈련지원
276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기반구축	방사선규제이해기반구축
277	국세청	기관운영 기본경비	모범납세자 선정 지원 사업
278	관세청	여행자통관진화	여행자통관지원 용역

100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279-1	관세청	관세탈루심사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업무 위탁
279-2	관세청	관세탈루심사	원산지검사 보조요원 운영
280	조달청	조달전문교육 운영	
281	통계청	통계전문교육지원	
282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교육	
283	경찰청	생활안전활동	지역사회경찰활동(시민경찰학교운영)
284	경찰청	여성청소년보호활동	소년범죄조사전문가참여제
285	경찰청	성폭력범죄수사지원	성폭력피해아동전문가참여제
286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287	문화재청	전통문화교육원운영지원	
288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사업	
289	문화재청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290	문화재청	궁능방재시스템구축	궁능방재시스템구축/안전경비인력
291	농촌진흥청	이공계대인턴쉽운영(R&D)	
292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	해외농업글로벌인재양성
293	농촌진흥청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정보화, 보조)	
294	농촌진흥청	농가경영개선지원(보조)	
295-1	농촌진흥청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농업인대학 운영
295-2	농촌진흥청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직접수행)
296	농촌진흥청	농기계안전교육사업(보조)	
297-1	농촌진흥청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보조, 경제)	농촌교육농장육성
297-2	농촌진흥청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보조, 경제)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시범
298	농촌진흥청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보조, 제주)	농기계안전교육사업
299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300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301	중소기업청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R&D)	
302	중소기업청	해외규격대응기반구축	
303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간협력증진	
304	중소기업청	여성기업육성	
305	중소기업청	창업저변확대	창업대학원지원

연번	부처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306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지원	
307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재기지원	진로제시컨설팅
308	중소기업청	벤처기업경쟁력강화	벤처기업 공동채용 훈련
309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컨설팅	
310	중소기업청	산학협력 기술·기능인력양성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31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운영	
312	중소기업청	창업인프라지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313	중소기업청	투융자복합금융사업	
314	중소기업청	신성장기반자금(융자)	
315	중소기업청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융자)	
316	중소기업청	창업기업자금(융자)	
317	중소기업청	제도약지원자금(융자)	
318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창업지원	유망아이템창업교육
319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융자)	
320	중소기업청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321	특허청	여성발명진흥	
322	특허청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대학(원)생 지식재산 강좌 운영
323	특허청	발명교육 활성화	발명교실운영
324	특허청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서비스업활성화
325	기상청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326	기상청	기상산업 활성화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327	기상청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예보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 (보성글로벌표준관측소 활용 연구)
328	기상청	정지궤도 기상위성 지상국 개발(R&D)	
329	기상청	선진 예보전문인력 양성	
330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331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	



Abstract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management of gender budgeting targeted programs and improvement measures

Hyo-Joo Kim
Byeong-Kwon Kim
Hae-Ram Kim

Gender budgeting has the objective of introducing gender sensitive concepts and principles to the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budget in order to improve gender equality at the national level. Therefore, it has two aspects to it; its characteristic as 'a major system of government finance' and as 'an official response at the national level to the gender inequality issue.'

There are a large number of agents in this system all of whom have different values and benefit from it in different ways, who are interrelated in a complex manner. Thus, it is vital that the conflicts between them are minimized to reduce inefficiencies that occur in the management of the system.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under the

current system of gender budgeting, only a portion of budgetary programs are selected as targeted programs.

In order to achieve its initial objective within such a limited scope, selecting appropriate targeted programs is an incredibly important matter. However, while the issue of targeted programs was a key subject of discussion even before gender budgeting was introduced, regrettably we have yet to find common ground.

What is the greatest obstacle to choosing suitable targeted programs and how will we decide on the policy direction? This research paper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management of the overall targeted programs, starting from Fiscal Year 2010 when this system was introduced up to Fiscal Year 2016, to accurately diagnose the problems related to targeted programs, then present policy measures.

The results of an analysis based on precedent studies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management reveal that there are problems related to targeted programs, which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The first issue is about the selection criteria of targeted programs and the second about the selection system. The last issue is related to government officials' low capacity for targeted programs.

To improve these three issues, we suggest that we revamp the draft guidelines and detailed guidelines for gender budgeting and furthermore that we issue instructions about the 'consultative body of gender budget and settlement-related departments' in this research paper. It is possible to implement these policy measures in the short term.

The starting point to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gender budgeting is to resolve the problem of targeted programs. This has become more of a pressing matter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long with the connection to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system. We look forward with keenest anticipation that the policy measures proposed in this research paper will be utilized in a useful manner.



2016 연구보고서(수시과제)-1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6년 7월 29일 인쇄

2016년 7월 31일 발행

발행인 : 이 명 선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978-89-8491-775-0 93330

<정가 11,000 원>